



주간통일정세 2010-26(2010.06.21~06.27)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송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10-26

Contents

- >>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정세

1. 대내정세

가. 정치

- **김정일 일정도 새나?…北언론보다 앞서 전해(6/21, 연합뉴스; 데일리NK)**
 - 북한 내에서 초특급 기밀로 다뤄지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현지지도’ 일정을 데일리NK가 북한 매체에 앞서 가장 먼저 보도해 주목
 - 데일리NK는 지난 18일 오후 5시53분 북한 내부 소식통을 인용, “17일 신의주 화장품공장을 방문한 김정일이 이틀째 일정으로 18일에는 신의주 신발공장을 시찰한 후 송한동에 위치한 ‘특각’(별장)에 머물고 있다”고 전함.
 - 북한의 대표적 매체로 김 위원장의 현지지도 소식을 가장 많이 전하는 조선중앙통신은 이보다 약 6시간 후인 19일 0시11분께 김 위원장이 신의주 락원기계연합기업소와 평안북도에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을 시찰했다고 전함.
 - 데일리NK 관계자는 “신의주 시내에서 김정일의 현지지도 차량 행렬이 목적지로 이동하는 것을 본 소식통으로 전해들은 정보”라면서 “중앙통신이 보도한 시찰 장소가 우리가 전한 내용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경위를 알아보고 있는데, 다만 신의주의 새로 건설된 축구경기장은 김정일의 송한동 별장 부근에 있다”고 말함.
 - 데일리NK는 첫 보도 다음날인 19일 속보에서 “김정일의 이번 신의주 일대 현지지도는 오늘 오전 7시 내부 유선방송망인 ‘3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도 알려졌다”면서 “김정일은 오후 3시까지 신의주에 머물다 평양 방면으로 이동했다”고 전함.
 - 이 매체는 또 20일에도 “김 위원장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과 락원기계연합기업소를 현지지도할 때 ‘김대장’(김정은 지칭)이 수행해 노동자들을 만났다”면서 “김 위원장 호위와 현지지도 업무를 대부분 김대장이 책임지고 처리한다”고 신의주 소식통을 인용해 말함.

-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 9월 상순 소집(6/26,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결정서를 발표하고 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당 대표자회를 9월 상순 소집키로 했다고 통신은 밝힘.
 - 통신은 23일 자로 발표된 결정서를 인용,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주체혁명위업, 사회주의 강성대국 건설위업 수행에서 결정적 전환이 일어나고 있는 우리 당과 혁명발전의 새로운 요구를 반영하여 조선노동당 최고지도기관 선거를 위한 조선 노동당 대표자회를 2010년 9월 상순에 소집할 것을 결정한다”고 전함.



- 북한이 노동당 대표자회를 개최하는 것은 1958년과 1966년에 이어 세 번째로, 무려 44년 만임.

■ 김정일 동향

- 6/20 김정일, 제593군부대 지휘관 강습소 시찰 및 12월5일 청년광산·북중기계연합기업소·북중전극공장·용천군장산협동농장 등 平北道 여러 부문사업 현지지도(6/20, 중방)
 - 김평해(평북 黨 책임비서), 김경희·태종수(黨 부장), 주규창·이재일(黨 제1부부장), 현철해·이명수(軍 대장) 등 동행 및 최종건(平北 인민위원장), 이철만(平北 농촌경리위원장), 문철(平北 지구계획위원장), 백성남(용천군 黨 책임비서) 등이 현지영접
- 6/24 김정일, 平南 평원군 '강정화' 할머니에게 100돌 생일상 전달(6/24, 중통)

■ 기타 (대내 정치)

- 김정일의 黨사업 시작(1964.6.19) 46돌 중앙보고대회, 4.25문화회관에서 진행(6/18, 중방·중통)
 - 최태복(黨 비서/보고)·김기남(黨 비서/사회) 등 참가
- 北, 訪北 한상렬 목사 환영 군중집회(청년중앙회관) 진행(6/23, 중방·중통)
 - 안경호(6.15실천 북측위원장)는 환영 연설에서 “보수패당이 천안호 침몰사건을 우리(北)와 억지로 연실시키고 있다”며 현 정세는 “6.15선언 고수 이행, 보안법 철폐, 反美투쟁” 등 선동

나. 경제

● 北원화가치 계속 하락...교환기능만 남아(6/22, 자유아시아방송(RFA))

- 방송은 북한이 화폐개혁 이후 북한 원화의 가치가 계속 떨어져 현재는 교환 기능만 남아 있고 저축 수단으로서의 가치는 거의 사라졌다고 전함.
- 방송은 청진, 단둥 등에서 전화로 접촉한 북한 주민들의 말을 인용, “장마당(시장)에서 중국 위안화가 통용되기 시작하면서 위안화만 있으면 어디서든 원하는 물건을 살 수 있는데다, 위안화로 사면 값을 깎아주기까지 한다”면서 “반대로 북한 돈을 내면 오히려 비싸게 받기 때문에 아이들도 위안화만 찾는다”고 말함.
- 방송은 이어 “서민들의 경우 시장에서 물품을 거래할 때만 북한 돈을 찾아 쓰고 저축을 위해서는 위안화를 모은다”면서 “보위부나 간부 가족들이 먼저 중국 돈을 앞다퉈 모으는 상황이다 보니 위안화 단속이 제대로 안 된다”고 덧붙임.
- 방송은 “아직 시중에 충분한 돈이 풀리지 않은 데 따른 착시현상일



것”이라면서 “작년 11월 말 화폐교환이 단행되고 그 다음달에만 기업소 등에 월급이 제대로 나가고 올해 들어서는 대부분 지급되지 않았다”고 설명함.

■ 기타 (대내 경제)

- 北 농업과학원, 나노기술에 기초한 효능높은 ‘농업용 살균제’ 개발 소개(6/24,중통)

다. 사회·문화

- 北주민 5~6월 中친척 대거 방문(6/21, 연합뉴스; 조글로 미디어)
 - 북한이 지난달 중순부터 한 달간 함경도 등 중국 접경지대 주민의 중국 친척 방문을 허용하면서 주민들이 지린(吉林)성 훈춘(琿春) 등지로 대거 몰리고 있다고 재중동포 온라인 매체인 조글로 미디어가 보도
 - 조글로 미디어는 길림신문을 인용, “조선(북한) 정부가 변경지대 주민들의 친척 방문 개방 시기를 5월로 변경하고 주민들이 약 한 달간 중국으로 친척방문을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했다”면서 “국경 개방 마감일이 돌아옴에 따라 훈춘시 해관(세관)에는 북한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함.
- 北선수들, 결전 앞두고 국수파티(6/21, 조선신보)
 - 신보는 남아공 요하네스버그발 기사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 주재 북한 대사관 직원들이 남아프리카의 재료로 손수 만든 국수를 대접하자 선수들은 별맛이라며 맛있게 먹었다”고 전함.
 - 안희정 남아공 주재 북한 대사는 “선수들이 우리 국수를 먹고 싶을 것 같아 준비했다”면서 “국수를 먹고 포르투갈을 꼭 이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신보는 덧붙임.
- 北TV, 포르투갈전 패배 생중계(6/21, 조선중앙TV)
 - 21일 44년만에 2010월드컵 경기에 나선 북한 대표팀의 포르투갈전을 실시간으로 생중계한 조선중앙TV의 캐스터와 해설자는 전반 29분 터진 포르투갈의 첫 골에 큰 아쉬움을 표함.
 - 이날 해설자로 나온 북한 축구해설의 간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는 “(첫골이 터지기 전까지) 경기운영이 비교적 공방전이 비등하게 전개됐다”며 2선에서 침투해 골로 연결한 메이렐르스를 막지 못한데 대한 안타까움을 전함.
 - 하지만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자기 경기방식을 그대로 유지하면 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본다”는 낙관적인 전망도 잊지 않았음.
 - 후반전이 시작되고 시망과 알메이다의 골이 잇달아 터지자 리 교수는 “우리팀이 후반전에 들어와서 잃은 점수를 회복하려는데로부터



거리 간격이 공격선과 방어선이 좀 늘어난 감이 있었는데 여기로부터 속공에서 이뤄진 실점"이라며 공격을 펼치다 잇달아 골을 내주자 아쉬워했음.

- 경기 종료 휘슬이 울리자 북한 아나운서는 “포르투갈팀은 두 번 경기를 해서 점수 4점이 됐다”며 “지금까지 국제축구연맹 2010년 월드컵경기대회 중에서 우리팀과 포르투갈팀간의 경기를 실황중계해 드렸다”며 중계를 마침.
- 리 교수는 경기를 중계하면서 호날두를 가리키며 “2008년 세계 최우수 축구선수상을 국제축구연맹으로부터 받았고 현재 세계적으로도 몸 값이 가장 높은 축구선수로 알려져 있다”고 소개했으며 북한 수비벽에 막혀 고전하자 “호날두가 시원한 경기장면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며 북한 대표팀의 선전을 우회적으로 칭찬하기도 함.

● 평양시민들, 포르투갈전에 크게 실망(6/22,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 시민들은 북한 축구대표팀이 포르투갈팀에 7-0으로 참패하자 크게 실망했다고 전함.
- 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조선중앙TV가 21일 저녁 8시 반부터 실시간 중계한 포르투갈전을 지켜보던 평양시민들의 기대와 흥분은 시간이 흐를수록 답답함과 실망으로 바뀌어 갔다”며 “기대가 부풀어 오른 만큼 실망도 컸던 모양으로, 상대팀의 높은 기술을 득점으로 확인한 그들은 말수도 적었다”고 전함.
- 신보는 그러나 “시민들 속에서는 여전히 세계 최강을 자랑하는 브라질팀과의 선전이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 있고 그것이 우연이 아님을 믿고 있다”며 “시민들은 ‘대회가 끝나지 않았으니 반드시 1승을 거둬 조선의 기상을 떨쳐야 한다’고 성원을 보내고 있었다”고 덧붙임.
- 한편 신보는 이날 별도의 케이프타운발 기사에서 북한 축구 대표팀의 간판 스트라이커 정대세(26.가와사키 프론탈레)가 포르투갈과 시합이 끝난 직후 눈물을 흘리면서 “동포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했다고 소개
- 정대세는 이 신문과 인터뷰에서 “전반은 비등비등하다고 느꼈는데 후반에 집중력을 잃고 실수가 많아졌다”며 “1966년 (잉글랜드) 대회의 설욕을 다하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해 응원해 준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함.
- 그는 이어 비 때문에 양팀간 기술의 차이가 나타난 것도 패인의 하나로 꼽으면서 “코트디부아르와 다음 시합은 반드시 이겨 기대에 보답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신보는 덧붙임.

● 北지윤남 선수 집에 ‘축하인사’ 쇄도(6/23, 조선신보)

- 신보는 평양발 기사에서 ‘2 대 1’로 석패한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만회골을 터뜨린 북한팀 “지윤남(34, 4.25체육단) 선수가 사는 평양 대동강구역 룡라2동 아파트로 동네 주민들은 물론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사람들이 연일 찾아와 지 선수의 아내 한춘영(30)씨



- 이 단체는 소식지에서 “열차 승객들은 집을 떠날 때 준비해온 ‘도중 식사’를 먹었지만 사흘도 지나지 않아 먹을 것이 다 떨어졌다”면서 “혹시나 기차가 다시 움직일까 싶어 그대로 머물던 중 닷새가 지나면서 쓰러지는 사람이 생기기 시작해 9일간 8명이 굶주려 목숨을 잃었다”고 밝힘.
- 소식지는 이어 “사고 후 4일째 되던 날 량강도 도당이 구조 지시를 내렸으나 혜산시 시당이 곧바로 대처하지 않았다”면서 “그들은 도당 지시가 떨어지고 5일이 지난 뒤, 다시 말해 사고 발생 9일째가 돼서야 움직였다”고 덧붙임.
- 이 사고 소식을 접한 백암군과 혜산시 주민들은 “철도 운영하는 것을 보면 강성대국이 아니라 멸망대국으로 가고 있다”면서 북한 당국에 깊은 불신을 보이고 있다고 소식지는 전함.

● 北, 한국 16강 진출 보도(6/26, 조선중앙TV)

- 조선중앙TV는 지난 23일(한국시각) 열린 한국 축구대표팀과 나이지리아팀간 월드컵 B조 리그 최종전을 이틀 뒤인 25일 밤 녹화중계 하면서 한국팀이 조 2위로 16강에 진출한 사실을 보도
- 북한 아나운서는 경기를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2-2 동점을 기록했다. B조의 순위를 보면 아르헨티나팀이 세 번 다 이겨서 점수 9점으로 첫 번째 자리를 차지했고 남조선은 한번 이기고 한번 비기고 한번 패해서 점수 4점으로 두 번째 자리를 차지했다”며 “이렇게 해서 아르헨티나팀과 남조선팀은 다음 단계에 올라가게 됐다”고 소개
- 이날 중계에서 후반 4분 박주영(25.AS모나코)의 프리킥 득점과 관련, 북한 아나운서는 “아주 꾸밈(짜고 만들어냄)이 좋았는데 10번 박주영 선수의 차기가 아니었습니까”라고 말했고, 해설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도 “오른발 발등 꺾어차기로 낮고 빠르게, 문지기가 어쩔 사이 없이 득점시켰다”고 평가함.
- 또 리 교수는 중계 도중 “이번 경기는 남조선팀에게 16강 진출 여부를 가늠하는 운명적인 경기”라고 소개했고, 아나운서도 “남조선팀은 이 경기에서 비기기만 해도 다음 단계 진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선수를 바꿔가면서 최대의 힘을 발휘하고 있다”고 말함.

● 北TV, 코트디부아르전 녹화중계(6/26, 조선중앙TV; 조선신보)

- 조선중앙TV는 26일 저녁 북한과 코트디부아르와의 월드컵 조별예선 G조 마지막 경기를 녹화중계함.
- 조선중앙TV는 0-3으로 진 코트디부아르전 전·후반 전체를 이날 오후 8시45분부터 편집 없이 방송했는데 북한 아나운서는 “이렇게 해서 이 경기에서 코트디부아르팀이 이기긴 했지만 다음 단계(16강) 진출은 불가능하다. 지금까지 우리팀과 코트디부아르팀 간의 경기를 보내드렸다”고 말하면서 중계를 마칩.
- 이날 중계에서 아나운서와 해설자인 리동규 체육과학연구소 교수



는 후반 30분 북한의 주공격수 정대세(가와사키 프론탈레)가 골키퍼와의 단독 찬스에서 득점으로 연결시키지 못하자 “아! 아깝습니다”를 연발하면서 “완전히 좋은 기회였는데 좋은 기회를 놓쳤다”며 아쉬워함.

- 정대세는 코트디부아르전에서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놓친데 대해 “내가 의도한 대로 볼을 다룰수 없었다. 큰 무대에서 골을 넣지 못하는것이 지금 나의 능력이다”면서 “앞으로 국제경기의 경험을 더 많이 쌓고싶다”고 말했다고 조선신보는 전함.

■ 기타 (대내 사회·문화)

- 북한주민 1명 서해로 남하(6/24, 연합뉴스)
- 경희극 ‘산울림’ 공연, 6.12-20 平南 안주에서 진행(6/21, 중방)
- 옥류관에 요리전문식당 건설이 빠른 속도로 추진(6/21, 중방)
- 러시아 국립아카데미 민속무용단, 함경남도 함흥대극장에서 공연(6/22, 중통)

2. 대외정세

● 北역사학회, 美에 ‘평화협정 체결’요구(6/21, 신화통신)

- 통신은 북한의 조선역사학회가 20일 미국에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 유엔군 사령부의 철수를 강력히 요구했다고 보도
- 이 학회는 규탄서에서 “6.25 전쟁이 발발한지 반세기 이상이 지났음에도 미군은 유엔군이란 명목으로 한국에 주둔,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북한 및 유엔의 대결구도를 여전히 이어가고 있다”고 주장
- 또 “1975년 제30차 유엔총회에서 유엔군 사령부 해산결의안이 통과돼 유엔사가 존재의 명분을 잃었음에도 미국은 유엔사를 철수시키려는 커녕 조직을 강화해 유엔의 신성한 사명과 인류의 양심에 대해 도전하고 있다”고 비난
- 학회는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는 것은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막고 평화를 수호하는 선결조건이자 한반도, 동북아 및 세계평화를 가늠하는 시금석”이라면서 “미국은 유엔사를 즉각 철수하고 북한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고 촉구

● 北 김창룡 국토상 등 47명 대거 방중(6/21, 연합뉴스)

-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지난 5월 3~7일 방중 이후 47명의 북한 측 실무대표단이 10일 가량 중국을 방문해 김 위원장 방중 ‘후속조치’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짐.
- 베이징의 유력 외교소식통은 21일 “김창룡 국토환경보호상을 단장



으로 한 북한 노동당 우호대표단 47명이 중국 공산당 대외연락부 초청으로 지난 12일 방중해 지금까지 머물고 있으며, 22일 출국할 예정”이라고 밝힘.

- 이 소식통은 “김창룡 단장이 직책은 국토환경보호상이지만 실제로는 국토분야 관련 업무에 비중이 있는 만큼 텐진과 다렌 등 개방구에 대한 방문을 통해 그와 관련한 실무적인 검토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일종의 김 위원장 방중 후속조치로 보인다”고 말함.
- 이어 “이번 방중단의 명단은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노동당 국제부 부부장이 포함돼 있으며 정치분야보다는 경제분야의 인물들이 다수를 이룬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임.

● 北외무성 ‘美, 비상중상 용서 안해’(6/21,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미국이 우리를 비방중상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함.
-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남조선의 일부 언론이 우리가 월드컵경기를 무단TV중계방송한다는 허위모략보도를 날린 것을 가지고 미 국무부 대변인 크롤리라는 사람이 무엄하게도 우리를 ‘범죄국가’라고 걸고 들었다”며 “우리가 월드컵 경기를 중계방송하는 것은 해당 국제기구들과의 합의에 준해 진행되는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말함.
- 그는 “신성한 주권국가에 대하여 감히 범죄국가라고 악담한 것은 극도의 반공화국 적대열에 들뜬 망발”이라며 “전략적 인내’라는 보자기로 속수무책을 가리고 6자회담을 비롯한 모든 대화를 회피하려는 현 행정부의 본심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
- 그는 “미국이 대화에 자신이 없다면 우리 역시 촉구할 생각이 없다”며 “그러나 미국이 비방중상하는데 대해서는 우리 식의 계산방법이 있다는것을 똑똑히 알아야 한다”고 덧붙임.

● 北신문, 日총리 ‘국교정상화’ 발언 비난(6/23, 조선중앙통신)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힘.
- 이에 대해 북한은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체면유지, 정치적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통신은 전함.
- 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일(북일)관계의 근본을 외면한 부당한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극우익 반대파들의 압력과 반발을 모면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민심낙기”라면서 “일본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납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며 과거청산을 떠난 조일 관계 정상화 타령은 기만이고 광대극”이라고 주장



■ 기타 (대외 일반)

- 美 국무장관의 中南美 방문 중 對北 언급(북한은 세계평화에 위협 등) 관련 “다른 나라들로부터 反北적대시 정책에 대한 지지를 얻어내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22, 중통·노동신문)
- 美 중앙정보국 소속 의사들의 테러혐의자 등 대상으로 한 ‘인권유린 행위’을 폭로하며 미국의 “국제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6/22, 중통·민주조선)
- 韓-日협정 체결(1965.6.22)은 “미국의 조종아래 일본 군국주의자들의 재침야망과 사대매국노들의 매국배적적 흥계에서 벌어진 침략과 매국의 흥정판”이라고 무효 주장(6/22, 평방)
- 北 서세평 리히텐슈타인 공국 駐在 대사, 6.17 駐在國 왕세자에게 신임장 제출(6/23, 중방)
- 박의춘 외무상, 6/22 토고 新任 국무상 겸 외무 및 협조상 ‘엘리오뜨 오인’에게 축전(6/23, 중통)
- 중국 산둥성 친선대표단(단장 : 왕민, 중국 공산당 산둥성총 비서장), 평양 도착(6/23, 중통)
- 미제가 “1945. 9. 8일부터 60년간 北에 입힌 모든 인적, 물적 피해액은 64조 9,598억 5,400만 달러에 달한다”고 강조하며 “이에 대해 끝까지 계산하고 피의 대가를 받아낼 당연한 권리가 있다”고 주장(6/24, 중통)

3. 대남정세

- 北신문, 玄통일 국회 ‘급변사태’발언 맹비난(6/23,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노동신문이 최근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언급한 현인택 통일부 장관의 국회 발언에 대해 논평을 내고 “역사적인 6.15 공동선언 발표 10돌이 되는 날 기념행사에는 머리도 들이밀지 않고 왕창 같은데(영똥한 데) 나타나 모략적이며 허황하기 그지없는 ‘급변사태’ 설을 다시 입에 올렸다”고 비난했다고 전함.
 - 현 장관은 지난 15일 국회 대정부 질의에서 화폐개혁 이후 북한의 급변사태 가능성을 묻는 한나라당 윤상현 의원의 질문에 “통일부 장관으로 언급하기 민감한 용어이나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답변했음.
 - 신문은 또 현 장관이 지난 16일 한 토론회에서 “앞으로 2~3년이 핵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문제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 것에 대해서도 “우리를 자극하는 수작이고 도발적인 악담”이라고 비판함.
- 北통신, 6.25전쟁 ‘북침론’ 재차 주장(6/24, 조선중앙통신)
 - 통신은 6.25전쟁 6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남조선 괴뢰군은 미군사고문들의 지휘 밑에 6월 25일 새벽 4시 38도선 전역에 걸쳐 공화국



- 북반부에 대한 불의의 무력침공을 개시했다”며 북침론을 재차 주장
 - 통신은 ‘미제는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이다’라는 제목의 비망록을 발표하고 “6월25일은 미제가 세계제패 야망 밑에 조선에 대한 침략전쟁을 도발한지 60년이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밝힘.
 - 이어 “미제가 제아무리 온갖 권모술수를 다 쓴다고 해도 조선전쟁의 도발자, 침략자로서의 정체는 절대로 감출 수 없다”며 “만약 미제와 그 추종세력들이 우리의 거듭되는 경고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제2의 조선전쟁’을 도발한다면 선군으로 다져진 백두산 혁명강군의 정의의 총검은 추호의 자비심도 없이 침략자들을 격멸소탕하고자 할 것”이라고 덧붙임.
 - 한편 북한의 조국통일민주주의전선 중앙위원회, 조선평화옹호 전국 민족위원회, 미군범죄진상규명 전민족특별조사위원회 북측본부도 이날 ‘공동성토문’을 발표해 6.25전쟁 북침론을 주장하면서 “온 민족은 반미, 반전평화의 기치를 높이 들고 미국의 무모한 대조선 적대시정책과 전쟁책동을 저지, 파탄시켜야 한다”고 밝힘.
- 北, ‘천안함 군사정전위 논의’ 제안 거부(6/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힘.
 - 통신에 따르면 군사정전위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회답 통지문을 보내 “군사정전위를 내세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미군이 말하는 군사정전위 조사결과는 괴뢰당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밝힘.
 - 북측 대표는 이어 “우리는 검열단을 남조선에 파견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북남 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 작정이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 제안에 응한다면, 즉시 북남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함.
 - 북측 대표는 실무접촉이 열리면 ▲검열단 파견 문제 ▲고위급 군사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대표단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임.



■ 기타 (대남)

- 訪北 한상렬 목사, 6.22 인민문화궁전에서 南 정부 비난(6/22, 중통·중방)
 - 기자회견을 통해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8월 15일 판문점을 통해 귀환할 것 과 서해상 한미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하고 외세공조를 민족공조로 바꿔야 한 다”고 주장
- 우리 정부의 천안함 피격사태 유엔 안보리 ‘설명회’ 진행 관련 “저들이 꾸민 사건을 정당화, 기정사실화하고 국제적 범위에서 反北 대결 분위기를 고취하기 위한 반역행위”라고 비난(6/22, 중통·노동신문·평방)
- KBS방송 인용, 南 정부의 10월 부산항과 주변해역에서 北을 대상으로 한 PSI 훈련 계획 비난(6/22, 중방)
- 통일부의 전방답사 청소년 ‘평화통일대행진’ 추진 관련 “북침전쟁을 도발하고 청년학생들을 대포밥으로 썩이기 위한 사전준비책동”이라며 “외국 대학생들에게 그릇된 인식을 주입시키고 그들을 통한 반공화국 공조에 박차를 가하려는 속심”이라고 비난(6/23, 평방)
- 對北 심리전 재개준비 관련 ‘직접적 선전포고’라고 주장하며 “단호한 타격은 비례적 원칙에 따른 1:1의 대응이 아니며, 서울의 불바다까지 내다본 무자비한 군사적 타격”이라고 위협(6/23, 중방)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北, ‘천안함 군사정전위 논의’ 제안 거부(6/27)

- 북한이 천안함 사건을 군사정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는 유엔군사령부의 제안을 거부하고 남측에 ‘국방위 검열단’을 파견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음. 27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군사정전위 장성급회담 북측 대표는 이날 유엔사에 회답 통지문을 보내 “군사정전위를 내세워 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미군이 말하는 군사정전위 조사결과는 괴뢰당국의 조사결과를 그대로 대변할 것”이라고 밝혔음.
- 북측 대표는 이어 “우리는 검열단을 남조선에 파견한 다음 그 결과를 갖고 북남 고위급군사회담을 개최할 작정이었다”면서 “남조선 당국이 우리 제안에 응한다면, 즉시 북남 고위급군사회담 개최를 위한 실무접촉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말했음.
- 북측 대표는 실무접촉이 열리면 ▲‘검열단’ 파견 문제 ▲고위급군사회담 개최 시기와 장소 ▲대표단 구성 문제 등을 협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한이 유엔사의 제안을 거부하면서, ‘국방위 검열단’ 수용을 전제로 남북 고위급군사회담을 역제안한 것은 천안함 사건을 ‘남북간의 문제’로 끌어내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시비를 가리려는 우리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무력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됨.
- 북측 대표는 이와 관련, “미군측이 이 문제에 개입하면 할수록 미국에 대한 우리의 의혹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더 이상 미군측은 ‘유엔군사령부’ 명의로 북남관계에 끼어들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유엔사는 천안함사건 특별조사 결과를 유엔 안보리에 정식 보고하는 한편,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군사정전위에서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내용의 통지문을 북측에 보냈음.

● “안보리, 금주부터 ‘천안함’ 논의 본격화”(6/27)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할 것으로 보임. 외교 당국자는 27일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아프가니스탄과 터키 방문 등의 해외일정을 마치고 이번 주말 뉴욕 유엔본부로 복귀한다”며 “천안함 사태에 대한 안보리 논의가 금주 중 본격화할 것”이라고 말했음. 안보리는 지난 14일 한국과 북한이 참여한 ‘천안함 브리핑’ 공방 이후 각국의 차석대사를 비롯한 실무급에서 ‘문구



조율' 작업을 진행해 왔음.

- 이와 관련, 정부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이 있어야 할 최소한의 내용으로 ▲북한 지목 ▲규탄·비난 ▲사과·보상 ▲재발방지 ▲책임자 처벌 등 5개 사항을 안보리 이사국들에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당국자는 “결의나 의장성명과 같은 형식에 대한 협의 단계까지는 아직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상임이사국(P5)과 일본, 한국 등 소위 ‘P5+2’를 중심으로 내용과 관련한 문안을 두고 집중적인 협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나 안보리의 구체적인 대응 조치는 중국, 러시아의 소극적 태도와 안보리 자체 일정 등을 고려할 때 다음 달에 도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3일 자로 유엔 홈페이지에 게재된 안보리 일정표에 따르면 이달 28~30일까지 천안함 사태와 관련한 비공식 및 공식 협의일정이 잡혀 있지 않음. 다른 당국자는 “안보리 대응 내용에 대해 전격적인 합의가 이뤄져 의장국이 일정을 잡아 이달 안에 안보리 대응을 도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현재까지 진행된 협의 내용을 생각할 때 안보리 대응이 다음 달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 G8, 천안함 대북 비난성명 발표(6/27)

- 주요 8개국(G8) 정상들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휴양도시 헨츠빌에서 이틀간의 회의를 갖고 천안함 침몰사건과 관련, 북한을 비난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 G8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46명이 비극적으로 희생된, 대한민국의 군함 천안함의 침몰을 가져온 지난 3월26일의 공격을 개탄한다”고 밝혔다.
- 정상들은 천안함 공격을 북한의 소행으로 규정한 다국적 조사 결과를 언급하면서 “우리는 천안함 침몰을 일으킨 공격을 비난한다”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민국의 어떤 공격이나 적대적인 위협도 삼갈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다.
- 이어 정상들은 “천안함 공격에 책임이 있는 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하고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미국의 한 관리는 G8 공동성명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한 강력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며 환영했다.
- 미국과 일본, 캐나다 정상들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비난을 주도했음. 특히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지난 25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회담에서 “G8이 한국을 지지하고 북한을 규탄하는 분명한 메시지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고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와의 회담에서도 북한의 천안함 공격이 “일본을 포함한 지역 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일본 관리들은 공동성명이 더욱 강력한 어조로 북한을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데까지 이르지 못한 것은 러시아의 반대 때문이었다고 전했다.



- 익명을 요구한 러시아 대표단의 한 관리가 러시아는 아직 천안함 사건 조사 결과를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하지는 않기 때문에 북한을 더 강하게 비난하는 것은 부정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음. 공동성명은 또 북한이 모든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촉구했으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유엔 제재를 모든 국가들이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은 이란 핵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이란의 핵 활동과 관련한 지속적인 투명성 부족과 우라늄 농축작업을 계속하고 확대하려는 의도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한다”며 이란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의 철저한 이행을 촉구했음.
- 아프가니스탄 전쟁과 관련, 공동성명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간 대통령이 지난해 제안한 5년 기간의 출구전략을 지지했으며 오는 9월 총선이 신뢰할 만하고 포괄적이며 투명하게 치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구호선 공격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데 대해서도 깊은 유감을 표시하고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봉쇄는 “지속될 수 없으며 바뀌어야 한다”고 촉구했음.
- 이와 관련, 이번 정상회의에 참석한 실비오 베를루스코니 이탈리아 총리는 기자들에게 “G8 회원국들은 이란의 평화적인 핵에너지 생산에 대한 보장이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이 선제적인 행동을 취할 것으로 보고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음.
- 정상들은 또 2002년 G8 정상회의에서 채택된 핵비확산 프로그램으로 2012년 종료되는 글로벌파트너십(GP) 프로젝트의 집행을 계속하기로 했지만 미국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연장하는 데에는 실패했음. 경제위기 이후 성장전략에 대해서는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미국과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을 고수하는 유럽 등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적자가 완화되어야 하지만 단기적으로 각국이 국가채무 정도에 따라 다른 전략을 채택할 수 있다는 선에서 합의하는 데 그쳤음.
- 담보 상태에 머물러 있는 도하 라운드에 대해서도 지난해 G8 정상회담은 올해까지 완료하기로 했으나 이번 G8 공동성명은 시한은 생략한 채 도하 라운드를 마무리한다는 의지만 천명했음. 공동성명은 또 경제위기로 인해 2015년까지 세계 절대빈곤 인구를 절반으로 줄인다는 목표가 위협받고 있다며 빈국들에 대한 원조도 올해까지 500억 달러를 지원한다는 목표치에 180달러나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음.
- 한편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와 영국이 유엔 안보리에 임시적인 안보리 개혁안을 제안했으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도 이를 지지하고 있다”고 밝혔음. 현재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미국, 중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 등 5개국이지만 독일과 인도 등은 상임이사국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음.
- 헌츠빌에서 200여km 떨어진 토론토에서는 26일 오후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비가 내리는 가운데 수천명이 G20 정상회의 폐지 등을 요구하며 경찰차를 불태우고 상점 유리창



을 부수는 등 과격시위를 벌이기도 했음.

● G8회의 개막..경제위기-천안함 논의(6/26)

-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가 캐나다의 휴양도시 헨츠빌에서 이틀간의 일정으로 25일(현지시각) 개막했음. G8 정상들은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회의에서 지난 2년에 걸친 금융위기 이후 경제정책에 대해 논의했으나 미국과 유럽 등의 견해 차이로 합의를 도출하는 데는 실패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재정지출의 중요성을 강조했지만 유럽과 일본, 캐나다 등의 지도자들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긴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음.
- 이와 같이 경제정책을 둘러싼 이견이 좁혀지지 않은 가운데 G8 정상들은 회의의 마지막날인 26일에는 의제를 이란 핵문제와 천안함 침몰 사건 등으로 옮겨 합의 도출을 시도할 것으로 알려졌다음. 미국의 한 고위 관리는 “26일 회의에서는 평화와 안보, 이란과 북한 등의 문제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라고 말했음.
- 이명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정상회담도 이날 이뤄질 예정인데 이 자리에서는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전해졌음. G8 정상들이 천안함을 공격한 북한에 대한 비난 성명을 채택할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음. 독일 dpa통신은 G8 성명 초안을 입수했다며 이 초안에는 G8 정상들이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강력히 비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고 보도했음.
- 이 통신에 따르면 초안은 “북한의 도발 행위는 국제평화와 안정에 대한 위협 요인”이라며 “북한이 주변국에 대한 모든 적대행위를 중단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의무를 존중할 것”을 촉구하고 있음. 교도통신은 그러나 익명의 관리들을 인용, G8 정상들은 러시아 등의 반대로 인해 천안함 사건의 배후로 북한을 적시하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다고 전했다음.
- 고다마 가즈오(児玉和夫) 일본 외무성 대변인은 25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캐나다와 독일 정상에게 북한의 천안함 공격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요인이라고 강조했다음. 이번 회의에서 분명한 대북 규탄 메시지가 채택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음.
- 미국과 유럽 국가 정상들은 또 이날 정상회의에서 최근 안보리 추가 제재를 받은 이란에 대해 더욱 강력한 제재를 취하도록 각국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다음. 중국과 러시아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을지는 미지수임. 한편 이번 정상회의 개최국인 캐나다의 스티븐 하퍼 총리는 25일 G8 정상들이 영아사망률을 낮추고 출산 중 산모 사망을 막기 위해 가난한 나라에 2015년까지 50억달러의 원조자금을 지원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음.
- G8 회원국이 아닌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빌 앤드 델린다 게이츠 재단 등도 추가로 23억달러를 제공, 빈국 모자 보전에 투입되는 원조



자금 규모는 모두 73억달러에 달함. 이런 가운데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26일 오후부터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약 2천명이 시위를 벌였으나 별다른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음.

● “北 핵개발이 한반도 평화·안정 위협” <中전문가>(6/24)

- 6.25가 발발한지 60년이 지났는데도 한반도가 안정과 평화에 위협을 받고 있는 것은 북한이 선군정치와 핵개발정책을 실시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중국의 한반도전문가로부터 나왔음. 중국의 장롄구이 공산당 중앙당교 교수는 6.25 발발 60주년을 하루 앞둔 24일 인민일보의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에 실린 기고문에서 이같이 주장했음.
- 장 교수는 남북한이 1990년대 옛 소련과 동구의 해체, 그리고 독일 통일 등 국제정치 환경의 거대한 변화 속에서 새로운 역사를 쓸 기회를 잡지 못한 것은 민족 이익, 현 국가이익, 집권집단의 이익 등이 서로 적당히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갈등을 일으켰기 때문이라고 분석하고 이에 북한 선군정치와 핵개발 정책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지적했음.
- 북한의 핵개발정책은 ▲국제사회의 핵확산금지 조류에 위배, 국제사회를 반발을 가져왔고 ▲동아시아의 핵 군비를 비롯한 군비경쟁을 촉발했으며 ▲ 한반도에 전쟁위험 가능성을 높였고 ▲ 인구밀집지역에서 실시돼 환경안전 위협을 고조시켰으며 ▲ 북한의 경제를 더욱 곤궁에 빠뜨렸다고 장 교수는 비난했음. 장 교수는 이어 북한은 6.25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자고 주장하고 있지만 핵개발·보유정책을 유지하는 한 미국이 이에 찬성할리가 없다고 단언했음. 미국 등 관련 당사국이 북한등과 평화협정을 체결하려면 이에 앞서 북한과 수교를 해야 하는데 이는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가로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의 핵 포기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임.

● <연합시론> 6·25 전쟁 60년과 한반도 평화(6/24)

- 내일이면 북한의 남침으로 6.25 한국전쟁이 발발한지 60년이 됨. 그 긴 세월이 흘렀지만 6.25는 한민족 현대사의 큰 상처로서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인식하는 국민이 많음. 60년 전 과거의 남북 간 전쟁이 종식되지 않은 채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백두산 분화구처럼 휴전상태로 있기 때문임. 그만큼 긴장과 대치 속에서도 남북 간 대화와 교류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를 정착시켜야 하는 과제가 우리 앞에 남아 있는 것임.
- 60년 전에 터진 6·25 전쟁으로 말미암아 남북에서 군인과 민간인을 합쳐 최소한 300만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실종됐음. 정전협정 체결까지의 3년여간 남쪽에서만 100만 명에 이른 민간 인명피해 가운데 피 학살자는 13만 명 정도임. 전쟁 중 희생된 아군 전사자는 유엔군 4만670명을 포함해 17만8천569명임. 적군 전사자는 11만6천명의 중공군을 포함해 63만6천여명이며 북측 민간인 희생자는 확



실한 통계조차 없음. 전쟁은 그만큼 승패에 관계없이 피아간에 참혹한 희생이 뒤따르며 군인보다 민간인 피해가 더 큼. 이 밖에도 귀중한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이 무차별 파괴되고 미망인과 고아가 양산되며 반인륜적 범죄행위가 횡행하는 것은 고금동서의 전쟁 역사가 증명하고 있음.

- 우리 장병이 365일 24시간 빈틈없이 경계하고 전략 전술을 연마하면서 비상시 전투에 돌입하면 반드시 이기도록 대비하는 것 못지않게 정파와 정권을 초월해 국민과 정부가 합심 협력, 유비무환의 태세로 사전에 분쟁 요인을 제거하고 전쟁을 억제하는 노력이 중요한 이유임. 한국전쟁이 2차 세계대전 종식 5년 만에 동서 이데올로기가 충돌하는 전선에서 터지고 3년 만에 미봉 되면서 미국과 소련은 초강국으로 치달게 됐음.
- 패전으로 깎터미가 됐던 일본은 후방 병참지원기지 역할로 부흥의 기틀을 다지고 인해전술의 지원군을 파병한 중국도 후진국에서 열강으로 나아가는 발판을 마련했지만, 전쟁터였던 한반도는 허리의 38선만 휴전선으로 바뀐 채 결국 최대 피해자로 남았음.
- 작년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파문에 이어 최근의 천안함 사태로 남북 사이에 험악한 말들이 오가고 국내외에서 대북 압박과 추가응징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음. 급기야 시대착오적인 ‘서울 불바다’ 발언이 다시 튀어나오고 전쟁 재발 우려까지 논란되는 상황임. 최근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전국의 성인남녀 1천명에 대해 여론조사를 한 결과 61%가 북한을 ‘경계·적대 대상’으로 응답해 1년 전의 39%보다 안보의식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음.
- 그러나 36%가 6·25 전쟁 발발 연도를 모르고, 20%는 당시 북한의 남침 사실도 알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음. 국방부 산하 국방연구원의 여론조사에서는 52%가 북한정부의 6·25 전쟁 발발 책임이 크다고 응답했으나 미국정부라는 대답도 19% 나왔음. 북한이 우리의 협력대상이라는 반응(47%)도 앞의 조사와 비교해 다소 높게 나왔음.
- 천안함 사태로 남북 간에 긴장국면이 지속하는데도 불구하고 국무총리와 통일부장관 등이 개성공단 유지 입장을 확고히 한데 주목하고자 함. 중국 등지로 우회해 북한을 이탈한 새터민들도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함.
- 5대 종단에 이어 민주 평통까지 대북 인도적 지원 확대와 3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 등을 정부 당국에 촉구한 충청도 시의 적절하게 검토돼야 할 것임. 선군정치와 핵개발 등에 치중하는 와중에 한국 국적의 정대세같이 유능하고 매력적인 선수들이 대표로 출전했는데도 월드컵 축구 16강에 오르지 못한 이유와 배경 등을 북한 지도층은 반추해봐야 함.
- 6·25 전쟁 발발 60년 이후 한반도 정세 변화의 화두는 비핵화를 전제로 한 평화가 돼야 할 것임. 최근 유엔군사령부 조사팀은 북한 잠수정의 천안함 공격을 정전협정 위반으로 결론 내고 이런 내용을 유



엔본부에 보고했다고 함.

- 북한은 미국, 중국이 함께 서명한 정전협정이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며 새로운 평화보장체계 수립을 주장하면서 1992년 남북불가침 조항이 포함된 남북기본합의서가 발효된 만큼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야 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음. 그러나 60년 전과 판이한 한국의 현재 경제·군사력 등 국력과 국제 역학관계를 고려할 때 한반도 평화협정은 남북한이 주도하고 미국과 중국이 보장하며 일본과 러시아 등이 추인하는 방식이 바람직함. 6자회담의 틀도 직간접적으로 유용할 것임. 6·25 전쟁을 종식하는 의미의 평화협정 체결에는 남북한과 한반도 주변국들이 원론적으로 공감하고 있음.
- 우선 남북간에 정치 군사적 신뢰구축이 전제되어야 함. 그러나 천안함 사태로 남북한의 군사적 대결구도가 심화해 당장 군축 등 긴장완화 조치에 들어가기도 어려운 상황임. 북핵 문제도 평화체제로의 전환을 위해 먼저 해결되어야 함. 뼈아픈 과거를 청산하기 위해 정전협정은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함. 평화 정착으로 가는 길에 아무리 비용과 시간과 노력이 들어도 아버지가 아들을 묻게 되고 불법 무도한 범행이 다반사로 저질러지는 전쟁의 폐해에 비견할 수는 없음. 평화도 자유처럼 거저 주어지지 않음.
- 때마침 국회 외교통상통일위가 '6·25 전쟁 참전용사 감사 및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정착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가결시켰음. 큰 의미가 있다고 봄.

● <5.24조치 한달>①안보리 논의 '답보'(6/23)

-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대국민담화를 통해 '단호한' 대북 대응 조치를 천명한 지 한달이 되고 있지만 '천안함 외교'는 아직 오리무중임. 천안함 사건을 국제 안보무대로 끌고가 단호한 대북 응징조치를 가하겠다는 정부의 구상이 냉엄한 국제정치의 현실에 부딪혀 의미있는 결과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형국임.
- 지난 한달간의 천안함 외교는 국제사회의 '분위기 조성'에 상당한 역할을 해온게 사실임. 다자 또는 양자 외교공간을 심분 활용해 북한의 책임을 추궁하고 규탄하는 국제사회의 여론 흐름을 속도감있게 확산시켜왔다는 평가임.
- 27개 회원국이 가입한 유럽연합(EU) 의회가 북한의 도발행위를 비난하는 대북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단적인 예임. 여기에 23일 현재 58개국과 5개 국제기구가 개별적 형식으로 우리 정부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앞다퉈 내놨음. 그러나 천안함 외교의 성패를 가를 최대 승부처는 역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임. 국제사회의 총의를 하나의 틀로 묶어 북한에 대해 엄중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최고 위급 외교공간이기 때문임.
- 이에 따라 천안함 외교의 본령도 북한의 도발행위에 상응하는 '형식'과 '내용'을 갖춘 안보리 대응조치를 이끌어내는데 있다는게 외교가



의 일치된 시각임. 하지만 외견상 드러나는 안보리 외교전은 당초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답보’를 면치 못하고 있는 흐름임.

- 지난 4일 안보리 공식회부 이후 15일 첫 비공식 협의가 시작됐지만 이후 논의는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형국임. 특히 안보리 이사국 대사들이 일제히 19일부터 열흘간 해외시찰에 나서면서 공식 논의 일정은 사실상 ‘일시 정지’된 상태임.
- 이에 따라 대사급이 참여하는 의미 있는 논의 일정은 이달 말 또는 내달 초로 넘어갈 공산이 커졌다는게 외교가의 지배적 시각임. 이 같은 흐름의 배경에는 대북 강경조치에 소극적 태도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놓여있음. 안보리 대주주격인 상임이사국(P5)에 속한 두 나라가 시종 신중론을 견지하면서 안보리 내부에서 뚜렷한 컨센서스가 형성되지 못하는 흐름임. 오히려 안보리 논의과정에서 남·북간 ‘진실공방’이 벌어지고 ‘한·미·일’과 ‘중·러’라는 정치적 대립구도가 가세하면서 논의의 흐름이 가일층 복잡해지고 있다는 관측임.
- 특히 이번 안보리 논의는 도덕적 책임보다 전략적 이해가 우선시되는 국제질서의 냉엄한 현주소를 재확인시킨 무대가 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옴. 중·러가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 보다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안보적 이해를 더욱 크게 고려하고 있다는 지적임. 정부는 기로에 서있는 형국임.
- 중·러가 반대 또는 기권하더라도 강도높은 대북 결의안으로 가느냐, 아니면 격을 낮추더라도 중·러가 동참하는 의장성명으로 가느냐를 놓고 뚜렷한 방향을 설정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임. 다만 국지적 군사분쟁이라는 사안의 특수성과 국제정치의 현실론을 고려할 때 의장성명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는게 외교가의 분석임.
- 문제는 성명문안의 ‘내용’임. 중·러의 소극적 반응 속에서 이번 안보리 대응이 정부가 당초 공언했던 ‘단호한’ 대북 응징의지를 충분히 담아내지 못한 채 ‘숨방망이’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이 시각이 벌써부터 외교가에서 대두되고 있음. 이런 분위기 속에서 금주 말 캐나다 토론토에서 열리는 G8(선진 8개국)-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안보리 외교전의 향배를 가늠할 중요한 바로미터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음.
- 외교가에서는 우리 외교가 천안함 문제에 외교적 역량과 자산을 모두 ‘올인’하기보다는 보다 중차대한 과제인 비핵화와 6자회담 이슈 쪽으로 ‘출구’를 모색할 시점이 됐다는 목소리도 대두되고 있어 주목됨.

● <5.24조치 한달>②‘北 돈줄죄기’ 지속(5/23)

- 정부의 천안함 대북조치가 오는 24일로 한 달을 맞지만 얼어붙은 남북관계가 개선될 전망은 여전히 어두움. 북측의 사과와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하는 정부 입장은 아직 강경함. 북한도 ‘천안함



사건은 날조극'이라는 기존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음.

- 정부의 대북조치 가운데 통일부가 취한 남북관계 전면 차단은 제재 조치 첫날부터 전격 시행됐음. 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간 교역·경협 전면중단, 개성공단·금강산지구를 제외한 우리 국민의 방북 일체 금지, 대북 신규투자 금지, 북 주민 접촉 제한, 영유아 등 취약계층을 제외한 대북지원 중단 등 대부분의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 유엔 안보리를 통한 외교적 대북 제재가 중국 등의 유보적 입장으로 상당히 지연되고 있고, 국제사회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해 무력시위 등 대부분의 군사적 조치도 유보된 상황과 비교됨. 경협·교역 전면중단 등 대북조치에 대해 북측의 피해 상황이 전해지지 않고 있지만, 북측은 일정 부분 '달리 부족' 압박을 받고 있을 것으로 관측됨.
- 정부는 개성공단을 제외한 대북 교역 및 경협 중단으로 북측이 적어도 연 2억5천만달러에서 3억달러 정도의 직접 피해를 볼 것으로 전망하고 있음. 그러나 대북조치가 한 달째를 맞으면서 우리 기업들의 피해도 커지고 있음. 대북 교역·경협업체들은 정부의 갑작스런 대북 교역·경협 중단으로 큰 피해를 보고 있다며 대북조치의 유예를 요구하고 있음.
- 개성공단은 대북조치에도 예외적으로 운용되고 있지만, 입주기업들은 정부의 체류인원 제한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음. 특히 불확실성이 확대되면서 주문 감소 등으로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긴급 운용자금 대출, 체류제한 해제 등의 대책을 호소하고 있음.
- 대북 지원단체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음. '민족의 화해와 평화를 위한 종교인모임'과 56개 대북 인도지원단체로 구성된 '대북협력민간단체협의회', 가톨릭 교회의 공식 원조기구인 '국제카리타스' 등은 최근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대북 인도적 지원 정상화를 촉구했음. 송영길 인천시장 당선자도 인천시가 올해 계획한 20억원 규모의 남북교류사업을 취임과 함께 즉각 시행하겠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음.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도 최근 정책보고서를 통해 이명박 대통령에게 남북관계 출구전략 마련과 전격적인 남북정상회담 추진 방안 등을 건의했음. 북측이 천안함 사태에 대해 전혀 태도 변화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조치에 대한 내부 압박이 커지는 양상임.
- 정부는 5.24 조치 이전에 북측으로 반출된 원부자재를 현지 위탁가공을 통해 들여오는 완제품에 대해서는 사안별로 반입을 허용하고 있음. 중소기업청을 통해 대북 경협업체 10여개사와 대북 위탁가공업체 200여개사에 대해 긴급 운용자금을 대출해주기로 했음.
- 영유아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사안별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통일부는 현재 해당 기업들이 요구하는 교역중단 유예나 개성공단 체류인원 제한 해제 등은 정부의 대북조치 기초를 훼손할 수 있는 만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임.



- 이에 따라 정부의 대북조치는 북측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앞으로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임. 정부 관계자는 23일 “북측이 전혀 잘못을 시인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북조치 해제 등을 논의할 단계가 전혀 아니다”고 말했다.

● 러, G8 성명초안서 北비난 문구 삭제 요구(6/21)

- 러시아가 이번 주 선진 8개국(G8) 정상회의 성명 초안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해 북한을 비난하는 문구 삭제를 요구, 성명 초안 준비 작업이 지연되고 있다고 일본 정부 소식통이 21일 전했다. 이 소식통은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를 바탕으로 이같이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공식적인 결론에 도달하지는 못했다고 말하고 있다고 전했다. G8 정상회담 주최국인 캐나다는 이달 중순 회원국에 보낸 안보분야 공동성명 초안에서 북한이 천안함 침몰에 책임이 있다는 내용을 적시했고 미국과 일본은 이를 승인했음. 그러나 러시아는 북한이 이 사건을 일으켰다는 확실한 증거가 없으면서 이번 회의 성명에서 해당 문구 삭제를 요구했다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일본 외무성의 한 고위 관리는 천안함 사태와 관련해 러시아가 이번 정상회의보다 큰 의미를 가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집중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나. 미·북 관계

● “美, 北 후계 김정은 성향·리더십 연구”<WP>(6/27)

- 북한이 오는 9월 노동당 대표자회의에서 김정일을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후계자로 공식화할 가능성이 있으며, 미국 행정부는 김정은의 리더십 스타일에 대해 집중 연구해 왔다고 미 유력 일간지 워싱턴 포스트(WP)가 27일 보도했음.
- WP는 북한 노동당 대표자회의 소집 이유에 대해 후계체제 공식화에 초점을 맞춰 분석하면서,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김일성 주석으로부터 후계자로 지명받는 것과 유사한 절차를 김정은이 밟아서 후계자로 공식 부상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음.
- WP는 최근 북한의 여러 움직임들을 김정일 위원장의 후계체제 공식화 수순과 연관지어 해석했음. 북한이 이달 초 최고인민회의에서 장성택을 ‘넘버 2’인 국방위 부위원장으로 선임한 것은 순조로운 권력이양을 위한 포석이라고 분석했음.
- WP는 “장성택은 세습 통치, 후계 이양을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의 임명은 매끄러운 권력이양을 위한 전략의 한 부분”이라고 전문가들의 말을 인용해 보도했음. 특히 지난 5월 김정일 위원장 방중의 주요한 목적 중 하나는 후계체제 이양에 대한 지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석했음. 그러나 중국은 김 위원장이 염두에 둔 세습 권력이양에 대해 이견을 제시했고, 이것이 양측의 갈등을 낳았을 수



있다는 해석도 덧붙였음.

- WP는 김정은의 스위스 유학 경험 등을 소개하면서 “성인으로 성장한 이후 그의 사진은 알려진 게 없다”면서 “미국 정부는 김정은이 어떤 스타일의 지도자인지 이해하기 위해 상당히 노력해왔다”고 소개했음. WP는 이들 연구에 정통한 소식통을 인용해 “김정은은 폭력적이고 상당히 자학적인 경향을 갖고 있는, 매우 문제가 많은 인물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김정은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전했다.
- WP는 그러나 “몇몇 전직 미국 정보 관리들은 그 같은 분석은 결함이 있는 분석이라고 언급하고 있다”며 “1980년대 김정일에 대한 연구도 김정일을 거의 두 문장도 연결해서 말할 수 없으며 나라를 통치할 수 없는 인물로 묘사했었다”고 지적했음. 하지만 김정일 위원장은 그 같은 분석과는 상관없이 거의 20년 동안 북한을 통치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상기시켰음.

● <전작권 연기,美싱크탱크 여론몰이도 ‘한몫’>(6/27)

- 한국과 미국 정부가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로 연기한 데는 미국 싱크탱크들을 중심으로 한 워싱턴 조야의 여론몰이도 한몫을 한 것으로 풀이됨.
-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들은 올해 들어 세미나와 정책 제언집 등을 통해 한·미 정부가 외교·안보분야에서 사실상 유일하게 이견을 보이고 있는 쟁점은 전시작전권 문제라고 지적하고, 버락 오바마 행정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었음.
- 지난해까지만 해도 미국 내에서는 전시작전권 전환문제를 단일 주제로 내세워 세미나를 개최할 분위기조차 형성되지 않았음. 보수 싱크탱크의 대표주자인 헤리티지 재단의 에드윈 풀너 이사장은 지난해말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은 미국에 있어 더 이상 ‘동생’(kid brother)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대등한 파트너인 만큼 전환시점을 재고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할 정도였음. 하지만 올해 아시아재단 한미정책연구센터와 맨스필드 재단은 지난 3월 25일 ‘전시작전권 전환과 한·미동맹에 있어서의 의미’라는 단일주제를 내걸고 공개토론회를 개최, 이 문제의 공론화에 본격적인 불을 댕겼음.
- 당시 토론회에는 황진하 한나라당 의원이 기초발제를 통해 전작권 전환 시점 연기를 강력하게 주장했고, 브루스 벡톨 미 해병참모대 교수, 마이클 오한런 브루킹스 연구소 연구원, 패트릭 크로닌 신미국안보센터(CNAS) 선임연구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등 전작권 전환 연기관론자들이 총출동 하다시피했음.
- 이 때를 기점으로 워싱턴 싱크탱크들 사이에서는 전작권 전환 연기 쪽에 방점을 찍는 의견이 큰 흐름을 이루기 시작했음. 미국외교협회(CFR)는 지난 15일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 23명으로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펴낸 ‘미국의 대한반도 정책’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의 ‘속도조절’을 촉구했음. 오는 2012년은 한국의 대선과 김일성



생일 100주년 등 한반도의 정치, 안보적 환경을 감안할 때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제안이었음.

- 앞서 지난 5월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출발 정책 연구그룹’도 ‘한미동맹의 새로운 출발: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전작권 전환에 열린 자세가 필요하다”며 사실상 전작권 전환 연기를 촉구하고 나섰음.
- 이 정책연구그룹은 불과 1년전에 내놓은 보고서에서는 전작권은 이미 한·미 정부간 합의된대로 2012년 4월 전환하는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내놨다가 올해 180도에 가까운 입장선회를 한 셈임. 외교소식통은 “워싱턴의 싱크탱크들은 미 행정부의 정책결정 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면서 “이번 전작권 전환 연기결정 과정에서 오바마 행정부가 우방인 한국의 안보 사정을 최우선 고려했겠지만, 워싱턴 싱크탱크들에 의해 조성된 미국내 여론도 완전히 무시하지는 못했을 것”이라고 분석했음.

● 오바마 “北 무책임행동 대가 있어야”(6/2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해 북한에 “책임이 물어져야 한다”고 밝혔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 뒤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그동안의 대북 언급 중 강력한 언급을 하면서 이같이 말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그런 (북한의) 무책임한 행동에는 대가들(consequences)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강력한 대북 규탄이 필요하다는 이 대통령의 언급에 “우리는 이 대통령의 뒤에 확고히 서 있다”며 강력한 지지 입장을 확인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또 오는 2012년 4월로 예정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연기하기로 합의한 사실을 밝히면서 “이는 적절한 시간을 (우리에게) 줄 것이며, 이렇게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말했음. 이 밖에 그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내년 초 의회에 제출할 방침임을 발표하면서, 미국은 협정을 막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과 논의를 재개할 것이라고 밝혔음.
- 이 논의들은 지금부터 오는 11월 서울에서 열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때 까지 이뤄질 예정임. 오바마 대통령은 이후 수개월 내에 의회에 비준안을 제출할 것이라면서 “그것이 해야 할 올바른 일”이라고 말했음.

● 美, 北에 “긴장 심화시키지 말라” 경고(6/26)

- 미국은 25일 북한의 서해상 항행금지구역 선포에 대해 미사일 발사 가능성을 주시한다면서 “긴장을 심화시키지 말라”고 경고했음.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남포 이북지역 해상에 19~27일 항행금지구역을 선포한 것과 관련한 질문



을 받고 “북한은 긴장을 심화시키는 행동을 삼가야 한다”면서 “이는 우리가 보기를 원하는 북한이 취할 조치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 크롤리 차관보는 “지금은 북한이 긴장을 완화할 조치를 취할 시기” 라면서 “과거의 경우 항행금지선포는 때때로 미사일 발사로 이어졌 음. 북한이 또다른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고 말 했음. 그는 “대신 우리는 북한이 2005년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구체 적 조치를 취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 수하며, 도발적 행동들을 중단하고, 이웃 국가들과 관계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을 보고 싶다”면서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는 그런 방향의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 北 “억류 미국인에 전시법 적용, 추가조치 검토”(6/24)

- 북한 당국이 억류 중인 미국인 아이잘론 말리 곱즈(30)씨에게 전시 법을 적용해 추가 조치를 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4일 밝혔음.
- 중앙통신은 “인도주의적으로 곱즈를 관대히 석방해줄 것을 미국 정 부가 요청하고 있지만 지금 같은 정세 속에서 그런 것은 더더욱 있 을 수 없으며 오히려 형을 어떻게 가중하는가 하는 문제만 남아 있 다”며 이같이 전했다. 중앙통신은 이어 “미국은 천안호 사건을 가지 고 국제적 압력 캄파니아(캠페인)를 벌리면서 조선을 계속 적대시하 고 있다”며 “조선은 이미 현 사태를 전쟁국면으로 간주하고 그와 관 련해 제기되는 모든 문제들은 전시법에 따라 처리한다는 것을 단호 히 언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 지난 1월 북·중 국경을 넘어 북한에 들어간 곱즈씨는 재판에 넘겨져 조선민족적대죄 등의 혐의로 8년의 노동교화형과 7천만원(북한 원 화 기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음. 북한은 지난해 12월 무단 입북한 재미동포 인권운동가 로버트 박씨를 억류 40여일만에 석방했으며, 작년 3월 북·중 접경지대에서 취재하다 북한 경비병에 붙잡힌 여 기 자 로라 링씨와 유나 리씨는 140일만에 풀려났음.

● 샤프 “北 비대칭적 공격에 대비”(6/24)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24일 북한의 비대칭적 공격에 의한 도발과 사이버 테러 등에 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이날 서울 용산 미 8군사령부 나이트필드에서 열린 정승조 연 합사 부사령관(대장) 취임식 치사를 통해 “한미연합사는 실전적 인 훈련과 연습, 최신의 작전계획, 미군과 연동하는 시스템 등을 통해 모든 유형의 군사적 충돌에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며 그같 이 말했다.
- 샤프 사령관은 “연합사는 땅과 바다, 하늘에서 북한의 어떤 도발이 나 공격을 억제하고 격퇴할 수 있는 경계태세를 훈련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 및 다른 안보환경의 도전에 대응하기 위해 계속 변화하



고 강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정승조 부사령관은 취임사에서 “천안함 사건 이후 지속되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과 불확실성은 연합사의 가치와 역할을 깨닫게 하고 미래를 위한 실질적 준비를 요구하고 있다”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유지해 북한의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존 위협에 즉각 대응하도록 지상구성군사령부의 작전계획과 임무 수행 능력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덧붙였다.

● 美 69년 北에 ‘전술핵 사용’ 비상계획 검토(6/24)

- 리처드 닉슨 미국 행정부는 지난 1969년 승무원 31명을 숨지게 한 북한의 미 EC-121 정찰기 격추사건과 유사한 도발이 재발할 경우, 북한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하는 내용의 비상계획(Contin gency Plan)을 한때 검토했던 것으로 드러났음.
-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민간연구기관인 국립안보문서보관소(NSA)가 23일 공개한 기밀문서에 따르면 닉슨 행정부는 한반도에서의 전면전 발발 가능성을 우려해 정찰기 격추사건에 대한 보복공격은 유보하되, 장차 유사한 도발행위가 재발할 경우를 상정해 국방부 등 외교·안보관련 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비상계획을 마련했음.
- 멜빈 레어드 당시 국방장관은 정찰기 격추 사건이 발생한 지 두달만인 1969년 6월 25일 북한에 대한 핵군사작전 시나리오를 포함해 총 25개의 주요 및 세부 옵션이 담긴 비상계획을 헨리 키신저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에게 보고했음.
- 문서에 따르면 이들 옵션 가운데 ‘프리덤 드롭(Freedom Drop)’이라는 작전명이 붙여진 ‘전술 핵무기 사용’ 비상계획은 북한이 새로운 도발을 감행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을 방위하기 위한 3가지 세부옵션을 제시하고 있음. 먼저 북한을 응징하는 차원에서 0.2-10 킬로톤의 파괴력을 지닌 핵무기로 북한내 12개 이상의 표적을 공격한다는 내용임. 핵무기 공격은 주한미군에 배치된 전술전투기 또는 항모배치 폭격기, 아니면 서전트 미사일과 어니스트 존 미사일을 이용하는 방안이 제시됐음. 이 때 북한내 표적은 지휘통제센터, 비행장 3곳, 해군기지 2곳, 미사일지원 시설 등이었음.
- 두번째 옵션은 70킬로톤의 핵무기로 북한내 16개 비행장을 타격해 공군력을 궤멸하는 방안이고, 세번째 옵션은 10-70킬로톤의 핵무기를 이용해 북한의 공격능력을 상당수준까지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비상계획에 따르면 북한에 대한 이 같은 전술 핵무기 사용으로 입게 될 미국, 한국, 기타 동맹군의 희생자 수는 전체 병력의 10% 미만이고, 민간인 희생자는 공격의 규모에 따라 수 천명에 달할 것이라고 추정했음.
- 이번 문서를 분석한 NSA측은 “핵공격임에도 불구하고 놀랍게도 민간인 희생자 규모를 적게 추산한 점이 눈에 띈다”고 지적했음. 그러나 이런 보고가 이뤄진 후 3개월만인 같은 해 9월22일자로 작성된



기밀문서에 따르면 대북 군사옵션과 관련한 최종 문건에는 세부 옵션을 포함해 총 14개의 옵션만 반영됐음.

- 이 문서에는 “이전의 문건에 나온 정보를 감안할 때 최종 보고서에서 제외된 옵션은 북한에 대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한다는 ‘프리덤 드롭’일 것으로 보인다”고 적혀 있음. 미 정찰기 격추 사건은 1969년 4월14일 북한 청진 동남쪽 공해상에서 정찰중이던 미 EC-121기가 북한 요격 미그기의 공대공 미사일에 맞아 추락한 사건임.
- 닉슨 행정부는 사건 직후인 15일과 16일 안보관련 회의를 열어 다양한 군사보복 옵션을 검토했지만, 북한의 반격에 따른 긴장고조 또는 전면전 발발 가능성, 군사행동이 베트남전에 미칠 영향,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 가능성 등 여러가지 요인을 감안해 군사보복을 포기했음.

● 美, 北 해외자금 동결 가능성 확인(6/23)

- 미국 국무부는 23일 해외은행에 유치된 북한 자금 동결 문제에 대해 “이런 방안들은 현재의 미국법과 국제법적으로 가능한 방안들”이라고 밝혔음. 필립 크롤리 공보담당 차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해외은행에 예치된 북한 자금을 마카오 BDA(방코델타아시아)식으로 동결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냐는 질문에 “우리가 고려중인 특정한 조치를 예견하지는 않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음. 크롤리 차관보는 “우리는 북한 정부에 압력을 넣을 수 있는 방안들을 항상 찾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 그는 “국제적, 국내적으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조치를 취할 권한을 갖고 있고, 북한이 노선을 변경하도록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들을 과거에 취해왔다”면서 “북한은 자금과 상품들을 곳곳으로 이동하고 있고, 우리는 (대량살상무기) 기술과 노하우를 확산시키려는 북한의 역량을 제한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의 현 (대북제재) 결의안을 이행할 것이며 옵션들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 문제에 대해 “검토를 하고 있다”는 원칙적 답변을 거듭했음. 그는 하지만 즉답은 피하면서 “한 나라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할 특정한 법적 기준이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음. 앞서 일본 언론은 미국이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대북 제재 조치의 하나로 북한 자금을 관리하는 복수의 아시아 은행에 대해 미국 내 거래를 제한하는 등 금융 제재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한 바 있음.

● 北외무성 “美, 비방증상 용서 안해”(6/21)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1일 “미국이 우리를 비방증상하는데 대해서는 결코 용서치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대변인은 이날 중앙통신 기자와 문답을 통해 “남조선의 일부 언론이



다. 중·북 관계

● “北보위부 중국인 5명 납치” <대북매체> (6/26)

- 최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이하 보위부)의 고문으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인 2명은 당초 보위부 조사를 받던 6명 중 일원이라고 ‘NK지식인연대’가 26일 밝혔음.
- 이 단체는 북한 현지 통신원을 인용, “보위부는 지난 20일 자강도 만포시에서 한국 물품을 조달하던 중국인 1명을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공범 5명의 신원을 추가로 파악했다”며 “보위부는 즉각 중국 현지에 침투해 이들 5명을 전원 납치해와 북한 주민의 탈북을 돕고 남한 상품을 북한에 밀반입한 혐의로 조사했다”고 주장했다.
- 단체는 또 “조사과정에서 이 중 2명은 풀려났지만 지린(吉林)성 통화(通化) 출신 2명은 가혹한 고문을 견디지 못해 숨지고, 지린성 옌지(延吉) 출신 2명은 아직도 조사를 받고 있다”며 “조사결과 이들이 반입한 남한 상품 중에는 최신 이동전화도 있었으며, 이들이 거래하던 남한 사람들의 연락처도 발견됐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 이 단체 관계자는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옌지 등 일부 북중 접경지역은 낮에는 중국 땅이지만 밤에는 보위부 세상이라는 말이 떠돌 정도로 보위부원들이 활개치고 다니기 때문에 납치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달 초에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 3명이 압록강 변경 무역 과정에서 북한 경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해 중국 정부가 북한에 강력히 항의한 바 있음.

● “中, 금강산관광 ‘관련 법 존중한다’” (6/25)

- 중국 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관광 자제 요청에 대해 “관련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음. 정부 소식통은 25일 “중국의 관광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이달 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중국은 관련 법을 존중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같이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우리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함. 다만 소식통은 ‘관련 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해 “남북 간 합의와 국제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여행사들이 오는 8월 현대아산의 사업권 내에 있는 외금강 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속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사업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고려관광은 오는 8월7일부터 1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외금강 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중국 관광객 30여명



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외금강 지역에 있는 구룡연 등을 수 시간 관광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때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온정각, 문화회관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것이 계약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측이 위법 행위를 철회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음. 현대아산이 독점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현지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튿날인 7월12일부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통일부 이종주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중국 관광객의 금강산 관광 움직임에 대해 “구체적으로 관광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관광 방식이나 일정 등을 정부도 관심 있게 지켜보면서 사업자(현대아산)와 필요한 협의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이 부대변인은 또 “정부는 북측을 비롯한 다른 사업자(중국 여행사)도 이미 정당하게 체결된 남북 사업자 간 계약과 남북 당국 간 합의, 국제 관례 등을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덧붙였음.

● “중국인 2명 北서 간첩혐의 조사받다 사망”(6/24)

- 중국인 2명이 최근 북한에서 간첩 혐의로 체포돼 조사를 받다 숨져 북·중 간에 외교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고 베이징의 대북 소식통들이 24일 전했다.
- 소식통들에 따르면 중국 지린(吉林)성 지안(集安)에 사는 대북 무역업자 2명이 북한 자강도 만포시를 방문했다 간첩 혐의로 체포됐고 북한 당국의 조사 과정에서 심한 구타로 지난 20일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들은 “북한은 이들의 시신을 넘겨줄 수 없다고 중국에 통보했고 중국은 책임회피를 목적으로 자국민에게 간첩 혐의를 씌운다고 반박하는 등 외교 갈등을 빚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음.
- 중국 외교부도 이 사건이 발생한 사실을 우회적으로 시인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사건 발생 여부를 확인해 달라는 요구에 “우리는 이 보도를 주의깊게 보고 있다”면서 “현재 관련 상황을 조사해 실태를 파악하고 있다”고 말해 해당 사건이 실제로 발생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쳤음. 이에 앞서 이달 초에는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시 주민 3명이 변경 무역 과정에서 북한 경비대의 총격으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 중국 정부가 북한에 항의한 바 있음.



면서 “국경 개방 마감일이 돌아옴에 따라 훈춘시 해관(세관)에는 북한주민들이 집중적으로 몰리고 있다”고 전했다.

- 훈춘 세관은 북한주민의 출입국이 급증함에 따라 입국 서류와 화물을 신속히 검사하고 24시간 출입국 안내 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출입국 편의를 제공,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지난 11일, 훈춘시의 한 세관 직원은 북한 주민 김모 할머니가 교통편 문제로 출국 시간내 세관에 도착하지 못해 애를 태우고 있는 것을 알게 되자 관계 당국과 협조해 제때 귀국할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를 취했다고 조글로 미디어는 소개했음.

라. 일·북 관계

● 北신문, 日총리 ‘국교정상화’ 발언 비난(6/23)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3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최근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의사를 표명한 것과 관련, “별로 새로운 것이 없는 체면유지, 정치적 처세술에 지나지 않는다”고 밝혔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전했다. 간 나오토 총리는 지난 11일 취임 후 처음 국회에서 행한 ‘소신표명 연설’에서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핵, 미사일 등 여러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함으로써 불행한 과거를 청산해 국교정상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일 조선중앙방송을 통해 간 나오토 신임 총리의 선출 소식을 짧게 전했다. 일본 새 내각의 대북정책에 비판적 입장을 보인 것은 처음임.
- 중앙통신에 따르면 노동신문은 ‘조일(북일)관계의 근본을 외면한 부당한 입장’이라는 논평에서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해 “한마디로 극우익 반대파들의 압력과 반발을 모면하고, 국민의 지지를 얻어내 정권의 안정과 유지를 보장하기 위한 민심낙기”라면서 “일본 앞에 나서는 급선무는 ‘납치, 핵 및 미사일 문제’ 해결이 아니라 과거청산이며 과거청산을 떠난 조일 관계 정상화 타령은 기만이고 광대극”이라고 주장했다. 노동신문은 또 별도의 논평에서 과거 일본의 중군위안부 문제 등을 거론, “일제의 강제연행, 납치 범죄는 세월이 흐르고 세대가 바뀌어도 절대로 지워버릴 수 없는 특대형 반인륜적 범죄”라면서 “우리 인민은 과거 일본의 반인륜적 특대형 인권유린 죄악을 반드시 결산할 것”이라고 경고했음.

● 日 납북자단체, 23일 철원서 대북 전단 살포(6/22)

- 일본인 납북피해자 단체 관계자들이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바란다’는 내용의 전단을 북한으로 날려보낼 예정이라고 산케이신문이 22일 보도했음.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납치피해자가족회’(가족회)와 ‘북한에 납치된 일본인을 구출하기 위한 전국협의회’(구하는 모임), ‘북한 귀국자의 생명과 인권을 지키는 모임’등 3개 단체는 23일 강원도에서 전단을 담은 대형 풍선 10개를 북한을 향해 날려보낼 예정임.



- 전단에는 한글로 ‘풍선을 통해 일본 민간단체가 편지를 드린다’라는 제목에 ‘김정일은 13세 소녀 등을 납치했다고 인정하고 사과했음. 납치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바란다’는 내용을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높이 10.5m, 폭 2m인 풍선에는 전단 6만장이 들어간음. 일본 단체들은 23일을 시작으로 대형 풍선 100개를 북한으로 날려보낼 계획임.
- 마스모토 데루아키(増元照明) 가족회 사무국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우리의 목소리를 북한에 있는 이들에게 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에 있는 대북 단체 관계자에 따르면 마스모토 사무국장과 니시오카 쓰토무(西岡力) 구하는 모임 회장 등이 23일 철원에서 ‘대북풍선단’ 이민복 회장 등과 함께 풍선을 날려보낼 예정임.

● 日경찰, 中경유 대북 수출 잇따라 단속(6/22)

- 일본 경찰이 22일 중국을 거쳐 북한에 중기계를 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후쿠오카(福岡), 구마모토(熊本)현의 건설회사 2개사 사장 2명을 체포했다고 교도통신과 산케이신문이 보도했음.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일제 동력삽(파워셔블)을 중국 다롄(大連)을 거쳐 북한 기업 ‘신흥(新興)’에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음.
- 앞서 야마구치(山口)와 효고(兵庫)현 경찰청은 15일 대북 교역 금지 품목인 화장품을 수출한 혐의(외환거래법 위반)로 시모노세키(下關)에 사는 한국 국적의 무역업자(63)와 역시 한국 국적인 부인(55)을 체포했음. 산케이신문은 일본 경찰이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동력삽 수출에 관련된 자료를 확보하고, 건설회사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음.
- 일본은 북한 미사일의 운반이나 발사에 이용될 수 있다는 이유로 중기계 대북 수출을 규제하고 있음. 일본은 2006년 1차 핵실험 이후 화장품 등 사치품, 지난해 6월부터는 일용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했고, 최근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에는 제3국을 거친 대북 수출 단속을 강화하고 있음.

마. 기 타

● <러시아 G8 대북 비난 성명 동참..그러나>(6/27)

- 러시아가 캐나다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앞두고 26일 개최된 G8(서방 선진 7개국+러시아) 정상회의에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대북 비난 성명에 동참했음.
- 러시아가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독자적이든, 다른 국제 협의체 안에서든 북한을 비난하기는 처음임. 물론 러측이 더 강력한 어조로 북한을 비난하지는 다른 국가들의 의견에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안



보리 대북 제재 논의를 앞두고 그 진의가 어떠한 북한에 대한 비난 대열에 동참한 것은 상당한 진진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음.

-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번 G8 공동 성명이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한 강력한 계기를 제공할 것이라는 의견과 일종의 다자 정부(政務) 협의체인 G8과 최대 외교 기구인 유엔은 그 성격이 다르므로 이번 성명을 확대 해석하는 것은 무리라는 지적이 엇갈리고 있음.
- 즉, 러시아가 이번 성명에서 다른 7개국과 공통된 입장에서 준 것은 G8내에서의 위상 약화를 우려한 일종의 외교적 제스처일뿐 러시아에 대한 북한의 태도가 바뀐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는 것임. 또 G8에 안보리 상임이사국(P5)인 미국,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속해 있지만 사실상 대북 제재의 ‘키’를 쥐 중국이 빠져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임. 러시아는 북한의 소행으로 결론 낸 민·군 국제합동조사단의 천안함 사태 조사 결과에 대해 아직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음. 러시아는 늦어도 다음달 초에는 전문가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자국 입장을 정리할 것으로 알려졌다.
- 그러나 모스크바 외교가에서는 러시아가 천안함 사건 자체 조사 결과를 공개할지는 미지수며 최종 입장에는 ‘정치적 고려’가 반영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임.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대통령은 최근 미 월스트리트저널(WSJ)과 인터뷰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하나의 견해만이 폭넓게 유포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를 즉각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서는 안된다”면서 “북한과 소통하는 일은 어렵지만, 북한을 궁지로 몰아넣어서는 안 되며 긴장을 높여 어떤 부적절한 행동이 촉발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러시아는 국제사회의 대북규탄 여론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보다도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안보적 이해를 더욱 크게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이번 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러, 미-중, 중-러 정상들이 연쇄 양자 회동을 통해 북한 문제를 협의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주부터 본격화될 안보리 대북 제재 논의 결과가 주목됨.

● 국제카리타스 “대북 인도지원사업 계속돼야”(6/22)

- 가톨릭 교회의 공식 원조기구인 ‘국제카리타스’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머셋팰리스에서 대북지원 특별소위원회 회의를 가진 뒤 성명을 발표, “한반도 갈등 완화와 북한 군사적 도발의 평화적 해결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그런 차원에서 빈곤에 시달리는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사업도 계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 국제카리타스는 올해 2~4월 북한 보건성과 함께 평양 지역 어린이와 청소년 약 50만명에게 B형간염 백신을 접종했고, 지난달에는 정부 기금으로 마련한 100만여명분의 백신을 평안남·북도에 보낼 계획이었으나 정부의 의약품 반출 허가를 받지 못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볼프강 게스트너 대북지원사업 대표가 지난 8~12일 평양을 방문했을 때 북한 보건성 측으로부터 ‘당초 일정대로 백신을 제공하고 아울러 B형 간염 연구를 위한 기술을 지원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전했다. 레슬리 앤 나이트 사무총장은 또 “국제카리타스는 여러 가지 활동 가운데 대북 지원사업에 우선 순위를 두고 있다”면서 “통일 이후 (남북 양측이) 직면할 경제적·사회적 어려움을 감안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대북 인도주의 사업을 지속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897년 활동을 시작한 국제카리타스에는 현재 전세계 165개국의 단체들이 참여해 재난구호 등의 활동을 하고 있으며, 특히 북한에 대해서는 1995년 이후 지금까지 400억원 규모의 지원사업을 벌여왔음.

● 브라질대사 “對北 추가제재 반대”(6/22)

- 아르날도 카힐료 평양주재 브라질 대사는 대북(對北) 교역과 대화를 확대하고 식량지원도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카힐료 대사가 지난 19일 전화 인터뷰에서 북핵과 한반도 안보 논의를 포함해 북한과 대화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로이터통신이 22일 보도했음.
- 카힐료 대사의 이 같은 발언은 루이스 이나시오 룰라 다 실바 대통령이 최근 이란 핵 문제 중재에 나서는 등 외교적으로 고립된 국가들과 외교적 관계를 빠르게 확장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임. 반면 미국은 서해 천안함 침몰 사건 이후 북한에 대한 추가 금융제재를 고려하고 있음. 브라질은 이란에 대해서와 마찬가지로 북한에 대한 제재가 비생산적이며 대화의 여지가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카힐료 대사는 “브라질의 주요 목표는 핵 문제와 인민군의 상시 전시체제 등 모든 면에서 대화의 문을 여는 것이다”며 “할 일이 많으며 브라질의 운명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이 적지 않다”고 강조했다.
- 브라질은 한반도 안보문제에 중재자 역할을 모색할 것이지만 현재까지는 그럴 기회가 없었다고 그는 설명했다. 카힐료 대사는 주요 식품 기업인 JBS나 브라질 푸드(Brasil Foods) 등 브라질 기업과 국영 농업 연구기관인 엠브라파(Embrapa)가 북한과 사업 협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이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음. 그는 이어 브라질은 북한에 콩과 쌀, 설탕, 분유 등 10만t의 식량 지원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와 관련해 카힐료 대사는 인민의 삶을 악화시킬 뿐 사회·안보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할 것이므로 반대한다는 견해를 피력했음. 하지만 그는 “우리나라의 문화적·역사적 상황을 존중받으려면 상대방에 대해서도 존중해야 한다”며 북한의 인권문제와 비민주적 체제가 상호 우호증진에 방해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입장을 드러냈음.



- 양국 교역규모는 지난해 브라질 통계 기준으로 2억1천500만달러에 이르며, 브라질은 중국에 이어 북한의 2대 교역국에 해당함. ‘영화광’이기도 한 카힐료 대사는 평양영화축전에서 브라질 영화를 상영하는 것을 시작으로 양국의 문화 교류를 늘릴 계획임.
- 지난해 북한과 브라질의 월드컵 축구경기에 대해서도 좋은 출발의 하나라며 의미를 부여했음. 카힐료 대사는 “좋은 외교란 언제나 접점을 찾는 작업이다. 의심할 여지 없이 이번 경기는 양국 국민을 결속하는 역할을 했다”고 덧붙였음. 한편 브라질은 지난해 처음 북한에 대사관을 열고 카힐료 대사를 파견했음.

● “천안함 사태는 테러, 北에 손해청구 가능”(6/22)

- 천안함 사태는 북한의 명백한 테러행위이며 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적 견해가 제시됐음. 장형길 변호사는 22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평우) 주최로 서울 전쟁기념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60주년 토론회’에서 “북한은 1·2차 연평해전과 대청해전 등으로 북방한계선(NLL)을 넘는 것이 저지되자 수상전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 군사적 테러로 천안함 사태를 감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음.
- 그는 “피해자인 한국정부와 사상자가 법원의 재판절차를 통해 북한에 민사상 불법행위의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며 “숨지거나 다친 장병의 손해배상과 어업권 침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 변호사는 “국제법적 관점에서 한국이 북한을 유엔국제사법재판소(ICJ)와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할 수 있으며, 유엔안보리에 넘겨 외교단절 등을 포함한 비군사적 제재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덧붙였음.
- 다만, 그는 사태에 관여한 잠수정 승조원이 살인죄와 공무집행방해죄, 선박전복죄, 폭발물사용죄 등의 공범이고 이를 지시한 자는 공모 공동정범에 해당하지만, 북한에 공권력이 미치지 못해 형사책임 논의는 실익이 적다고 설명했다. 6·25전쟁 60주년을 앞두고 전쟁 발발과 북한이 저지른 반인권적 행위의 책임 소재도 거론됐음.
- 제성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25가 반국가단체인 북한이 대한민국에 대해 일으킨 내란이고 이후 국제연합의 개입과 중국의 참전으로 국제화됐다”며 “전쟁 중 반인도 범죄에 대해 역사적·정치적·도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의견을 냈음.
- 김태훈 변호사는 전시납북자가 9만6천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소개하고 남북 피해가 올바르게 해결돼야 전쟁이 끝난다고 말했다. 변협은 ▲6·25전쟁과 천안함 사태에 대한 법적 책임 추궁 ▲ 법조인 납북 등에 대한 책임 추궁 및 귀환 노력 ▲ 이산가족 생사확인 및 재결합 등의 목표를 추진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키로 결의문을 채택했음. 대한변협 관계자는 “천안함 희생장병 유가족 등 피해자가 북한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설 경우 적극적으로 도



을 것”이라며 “실제 가해자 처벌에까지 이르지 못한다 해도 테러 세력에 대해 경고를 주는 등 재판 자체가 갖는 상징적인 의미도 크다”고 말했다.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국방부 “전작권, 양국지도자간 정치적 결단”(6/27)

- 국방부는 27일 한국과 미국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시기를 2015년 12월1일로 늦추기로 전격 합의한 것과 관련, “실무적 협의도 진행해 왔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양국 지도자간 정치적 결단이기 때문에 상세히 설명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 장광일 국방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양국간 협의를 진행하면서 안보 관련된 민감한 내용을 공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공개할 수 없었다”면서 그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지난 2월께 김태영 국방장관을 중심으로 로버트 게이츠 미국 국방장관과 실무적으로 협의했고 청와대와 백악관 채널, 실무적 채널 등을 가동해 미측과 긴밀한 협의를 해왔다”며 “이번 합의는 정상간의 신뢰, 국방실무자로부터 장관간 신뢰가 원만한 합의를 이끈 원동력이 됐다”고 강조했다.
- 그는 “내부적으로 팀을 구성했고 한·미간에 수차례에 걸쳐 협의를 해왔다”며 “상호간 신뢰와 이해의 바탕이 기초가 되다 보니 비교적 짧은 기간에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합의는 지난 정부의 전작권 전환 합의를 존중하는 바탕에서 출발했으며 2012년이라는 시기와 안보 전략 상황을 평가해보니 불안정성이 증대됐고 미측도 일정을 조정하는 데 공감했다고 장 실장은 전했다.
- 그는 “월터 샤프 연합사령관과 게이츠 장관이 100% 동의했으며 최종적으로 양 장관간 이행에 관한 완벽한 사전합의 바탕에서 정치 지도자간에 결정했다”고 강조했다. 2015년 12월로 합의한 배경에 대해 “그때가 되면 안보 환경도 어느 정도 호전될 것이라는 상황평가와 함께 한국군의 주도능력이 상당 부분 갖춰지게 된다”면서 “대략 2015년 말이면 주한미군 기지이전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시기이고 새로운 지휘구조를 만들기 위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양국이 공동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 그는 “현재 전작권 전환 작업이 65% 정도 갖춰졌다”며 “전작권 연기 문제가 내년까지 넘어가면 이양에 대한 부담이 커진다. 올해 전반기에는 합의대로 갈 것인지, 아니면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무적 판단과 정치적 결단이 이뤄지면 이상적일 것이란 판단에 따라 양국



대통령이 정치적 결정을 하게됐다”고 말했다.

- 그는 다만 당초 예정대로 2012년에 전작권을 환수하는 것에 대해서도 “전혀 문제가 없다”며 “군으로 봐서는 보완할 요소는 있지만 능력은 충분하고 3년 정도 기간이 늘어나면 보완할 요소를 더 보완할 수 있어서 좋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작권 이양의 보완 요소와 관련, “전구작전 지휘체계 구축, 한·미 군사협조체계 구축 등 6가지, 35개 과제를 평가해보니 소소한 것들이 있지만 큰 차이는 없다”며 “우리 군의 능력이나 천안함 사태가 전작권 환수 연기의 주요 원인은 아니다”고 강조했다.
- 장 실장은 추가 연기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금 합의한 것에 대해서는 더 이상 연기 여부를 재론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3년 반 정도 기간이 지연됐기 때문에 연합연습 등을 어떻게 할지 구체적으로 협의하게 될 것”이라며 “내년부터 2015년까지 연습을 어떻게 할지는 올해 연합연습이 끝나면 합참과 연합사가 구체적인 협의를 거쳐 타임 테이블을 발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미는 구체적인 전환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7월 개최될 ‘2+2 장관급회담’과 기존의 한미 협의회를 이용해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나갈 것이라고 장 실장은 덧붙였다.

● 오바마 “한미FTA비준안 내년초 의회제출”(6/2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의회 비준에 앞서 양국간 이견을 11월까지 해소하고 이후 몇 달 안에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미 무역대표부(USRT)는 이날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한·미FTA 비준을 위해 이러한 일정을 밝히는 한편 론 커크 USTR 대표에게 한·미FTA와 관련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과 새로운 논의를 시작하도록 지시했다고 전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11월 서울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한국을 방문하기 전까지 새로운 논의과정을 마무리하도록 목표를 제시했다고 USTR는 밝혔다. USTR는 또 이러한 현안들이 성공적으로 해결되면 몇달안에 오바마 대통령이 비준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토론토에서 가진 브리핑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토론토 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출국하기 전 커크 USTR 대표에게 한·미FTA에 관한 실무협의를 지시했다”고 전했다.
- 김 본부장은 “오바마 대통령이 처음으로 USTR에 실무협의를 지시했음을 밝혔고 처음으로 (FTA 비준을 위한) 시간계획을 언급했다”면서 이는 종전보다 강하고 구체성 있는 안을 내놓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은 그동안 한·미 FTA 비준에 앞서 자동차 및 쇠고기 교역과 관련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해 최선의 방안을 찾고 있으며, 이런 현안이 성공적으로 해소될 경우 FTA 비준을 위한 일정을 놓고 의



회와 협의를 벌여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보여 왔음. 이에 따라 자동차 및 쇠고기 문제와 관련한 한미 통상당국간의 추가 논의가 조만간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 <美의회서 한국전 포럼도 열려>(6/25)

- 6·25전쟁 60주년을 맞아 미국 내에서 각종 기념 행사가 열리는 가운데 24일 워싱턴 D.C.의 연방의회에서 관련 포럼도 개최됐음. 대통령 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워싱턴협의회 주최로 이날 의사당 캐피털비지터센터에서 열린 포럼에는 미국측에서 데니스 헤스터트 전 연방하원 의장 및 제럴드 카널리(버지니아), 존 사베인즈(메릴랜드), 프랭크 울프(버지니아) 하원의원, 토머스 허바드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 등이, 한국측에서는 신낙균(민주), 송영선(미래희망연대) 의원 등이 발제자로 참석, 한반도 평화증진 및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제안했음.
- 헤스터트 전 하원의장은 ‘6·25전쟁 60주년,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 발제를 통해 정전 이후 남북간의 상이한 발전 상황을 거론하면서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가 올 것”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음.
- 그는 특히 “남북한이 재통일되어야 하는 목적 의식, 한 국가를 이뤄야 한다는 열정 및 지속성을 가져야 한다”고 한국 국민에게 조언했음. 카널리 의원은 “한국은 굉장한 성공의 스토리”라고 전후 발전상에 찬사를 보내면서 “한미 양국관계를 성숙시키기 위해서는 자유무역협정(FTA)을 가급적 조속히 발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음. 허바드 코리아소사이어티 회장도 “행정부와 의회 지도자들은 FTA의 인준 시간표를 명확히 함으로써 우리와 한국간에 60여년간 이어진 동맹을 기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신낙균 의원은 “대결과 긴장의 대북정책으로는 지금의 위기를 헤쳐 나갈 수 없다”면서 “6.15 정신으로 돌아가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조속히 개최하고, 나아가 한반도에서 항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만들기 위해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영선 의원은 6.25전쟁 당시 미국인들의 희생과 기여를 통해 한국이 평화롭고 번영된 국가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사의를 표한 뒤 “북한이 자신들의 사회를 개방하고 핵을 포기하도록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면서 “북한은 지금의 정책을 고수하는한 파멸의 길에 접어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음. 이 밖에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군(軍) 지휘권 통일의 중요성을 지적하면서 2012년으로 예정된 전작권전권 이양에 대한 반대 의사를 거듭 밝힌 뒤 “올바른 접근법은 전작권 전환을 단순히 지연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 계획을 폐지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 백악관 “한미정상회담, 동맹·안보에 초점”(6/24)

- 미국 백악관은 23일 토론토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기간에 열린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대통령 간의 한미정상회담이 현안을 협의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G8(선진 8개국), G20 정상회의 참석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에서 한미정상회담이 26일 열릴 것이라고 확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국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동맹 중 하나”라면서 “한국과 지금 많은 문제들에 대해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며, 최근의 상황을 감안할 때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협의를 할 매우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 그는 “이번 회담의 초점은 북한 어뢰공격으로 천안함이 침몰한 데 따른 안보와 동맹 문제에 맞춰질 것”이라면서 “이번 회담은 한국과 우리의 강력한 연대를 공개적이고 사적으로 증명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이번 회담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 대통령과 쌓은 특별히 강력한 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될 것”이라면서 “두 정상은 여러 번 통화를 하고 만났으며, 오바마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 대해 큰 존경심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 그는 “여태껏 아시아 문제를 다루면서 지금보다 더 나은 한미관계를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백악관은 이날 오바마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의 기간에 이 대통령 외에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와 첫번째 공식 양자 정상회담을 갖는 것을 비롯해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인도네시아 대통령 등과 별도로 회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25-26일 열릴 G8정상회의에서 북한, 이란, 아프가니스탄 문제 등이 다뤄질 것이며, 후진타오 주석과의 미중 정상회담에서도 북한 문제가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 “전작권 상황인식, 北 2차핵실험후 시작”(6/24)

- 유명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4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연기논의의 시작 시점과 관련, “상황의 변화에 대한 인식이 시작된 것은 미국 오바마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북한의 제2차 핵실험이라고 생각해도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유 장관은 이날 오후 내·외신 정례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히고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 양국의 전작권 문제에 대한 상황인식의 변화가 천안함 사건을 계기로 촉발된게 아니라 그 이전인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부터 시작된 것”이라며 “그러나 전작권 연기 논의가 2차 핵실험 직후부터 이뤄진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 유 장관은 “전략적 전환체제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한반도 주변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해해달라”고 말하고, 전작권 문제가 금주말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 한·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지 여부에 대해서는 “정상회담 의제로 아직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예단해서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 그는 그러나 “한·미 양국은 전작권 전환 계획에 따라 이행 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정세 평가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정상간에 필요하다면 양국간 관심사에 대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천안함 사건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응조치와 관련, “안보리 대응 논의를 대북 결의안으로 시작했다”며 “이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주요 상임이사국들의 의견”이라고 밝혔다.
- 그는 “우리나라가 안보리 이사국이 아니기 때문에 안보리 대응 조치와 관련해 우방국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중”이라며 “협상과정에서 대북 결의안이 될 지, 의장성명이 될 지는 안보리 논의의 추진상황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안보리 대응문안의 내용과 관련, 유 장관은 “안보리가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재발방지를 촉구하는 조치가 있어야 된다”며 “현재 구체적인 논의는 안보리 상임이사국과 한국, 일본 등 소위 P5+2를 통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유 장관은 주요 우방국들의 대북 양자·다자조치에 언급, “유엔을 통한 국제사회의 대북규탄도 중요하고, 북한으로 하여금 이러한 도발행위에는 대가가 따른다는 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적으로 느끼게 하는 양자적·다자적 대북 제재조치도 중요하다”며 “안보리 조치가 있을 경우 결의 1874호의 더욱 철저한 이행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고, 각국이 취하는 양자·다자 제재조치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유 장관은 6.25 전쟁 60주년을 계기로 한 평화협정 논의 가능성에 대해 “평화협정은 남북한간에 이뤄져야 하며 우선 남북간 신뢰에 기반해야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며 “그러나 북한은 여전히 소위 인민해방전쟁론을 주장하며 남침이라는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나. 한·중 관계

● “中, 금강산관광 ‘관련 법 존중한다’(6/25)

- 중국 측이 금강산 관광지구에 대한 우리 정부의 중국인 관광객 관광자제 요청에 대해 “관련 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전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 소식통은 25일 “중국의 관광정책 담당 부처인 국가여유국이 이달 초 우리 문화체육관광부 앞으로 ‘중국은 관련 법을 존



중한다’는 답신을 보내왔다”고 말했다. 소식통은 또 “중국이 금강산 관광 문제에 대해 ‘남북 간 대화로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고 전해왔다”고 설명했다.

- 중국의 이 같은 입장이 우리 측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것인지는 다소 불명확함. 다만 소식통은 ‘관련 법을 존중한다’는 의미에 대해 “남북 간 합의와 국제법 등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며 “우리의 입장을 이해한다는 의미로 해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중국 여행사들이 오는 8월 현대아산의 사업권 내에 있는 외금강 관광을 추진하고 있어 중국 정부의 속내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고 있음. 금강산 독점 사업권을 가진 현대아산의 사업권 침해에 대한 논란도 커질 것으로 보임.
- 중국 고려관광은 오는 8월7일부터 17일까지 10박11일 일정으로 외금강 관광이 포함된 관광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중국 관광객 30여명은 앞서 지난달 말에도 외금강 지역에 있는 구룡연 등을 수 시간 관광하고 돌아간 것으로 전해졌음.
- 앞서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지난 5월 중국 국가여유국에 공한을 보내 중국 관광객의 북한 지역 단체 관광 때 우리 측 자산이 있는 금강산 관광지구의 내금강, 외금강, 해금강 등을 관광 대상 지역에서 제외하도록 중국 측에 협조를 요청했음.
- 이와 함께 북한이 온정각, 문화회관 등 금강산 관광지구 내 남측 자산을 동결, 몰수한 것이 계약 위반임을 설명하고 북측이 위법 행위를 철회하도록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었음. 현대아산이 독점 사업권을 가진 금강산 관광은 2008년 7월11일 우리 관광객 박왕자씨가 현지에서 북측 초병의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면서 이튿날인 7월12일부터 관광이 전면 중단된 상태임.

● 中, 천안함 사건에 입장변화 없어(6/24)

- 중국 정부의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입장이 현재까지 별다른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브리핑에서 천안함 사건에 대한 자체 조사가 끝났는지와 중국 정부의 입장 변화가 있는지 질문에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음.
- 친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은 매우 복잡한 사건으로 중국은 천안함 사건에 대한 1차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면서 “우리는 사건의 옳고 그름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해 기존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 그는 “우리는 한국과 다른 국가들이 진행한 공동 조사결과와 다른 당사국의 반응을 중시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각분야의 상황을 진지하게 연구하고 파악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해 정세가 한층 더 긴장되는 상황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천안함 사건 처리에 대한 중국의 출발점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수호”라면서



“우리는 이를 출발점으로 삼아 유관 문제를 처리할 것”이라며 평화 및 안정의 중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 그러면서 그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북한이 각자의 입장과 관점을 설명한 것은 안보리 이사국들이 상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한·일 관계

● 간나오토 “과거 반성하며 새 미래 노력”(6/27)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는 26일 오후(현지시간) 토론토에서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일본은 과거를 외면하지 않고 반성할 것은 반성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위해 노력해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간 총리는 “금년이 한일관계에 있어 매우 중요한 해”라고 말했고, 이 대통령은 “한일 양국이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신뢰를 바탕으로 새로운 100년을 향해 진지하게 협력하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답했다고 청와대가 전했다.
- 이 대통령은 또 천안함 사태와 관련, 그간 일본 정부의 지지에 사의를 표했고 간 총리는 천안함 희생장병과 유가족에게 애도와 위로의 뜻을 전했다. 양국 정상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천안함 사태 처리 과정에서 계속 긴밀히 공조해 나가기로 했으며 11월 서울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및 일본 요코하마(横浜) APEC(아태경제협력체)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회담은 간 총리 취임 이후 처음으로 개최된 한일정상회담임. 이 대통령은 한일 정상회담에 앞서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과 면담을 갖고 서울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방안과 기후변화, 개발 문제 등 글로벌 이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 반 총장은 “이 대통령이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해 개발문제를 선도적으로 이끌고 있어 유엔 사무총장으로서 큰 힘을 얻고 있다”면서 “기후변화와 개발을 함께 다룰 유엔 고위급 패널을 발족하는데, 대통령께서 얼마전 발족한 글로벌 녹색성장연구소(GGGI)도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 총장은 그러면서 오는 9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 정상회의에 이 대통령을 기조연설자로 초청했다.
- 이 대통령은 이어 G20 정상 공식환영식 및 업무만찬에 참석하는 것으로 제4차 G20 정상회의 공식일정을 시작했다. 이 대통령은 비공개로 이뤄진 만찬에서 재정 건전성 회복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각국 사정에 따른 재정 구조조정의 차별화와 금융 안전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 “한일교류 늘자 사건증가”..당국 대책회의(6/24)

- 최근 한류 붐으로 한일 양국간 교류가 빈번해지면서 사건이 덩달아 늘어나자 외교 당국이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음. 주일 한국대사관



영사부는 24, 25일 이틀간 도쿄 영사관 3층 회의실에서 일본 내 10개 공관의 경찰관 등 사건·사고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대책회의를 열 예정임. 일본 내 한국 공관의 사건·사고 담당자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회의를 여는 것은 이번이 처음임.

- 이번 회의는 지난 3월 가나자와(金澤)시에서 한국인 여성이 일본인 동거남에게 살해된 채 발견되는 등 강력 사건이 벌어지고, 해상 사고가 발생하는 등 일본 내 한국인 관련 각종 사건·사고가 잇따라 일어나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음.
- 24일 오후 2시께부터 열리는 회의에서는 주일 지역 공관간의 연락 강화, 국내 유관 부처 지원 건의 등 대책을 논의하고, 25일에는 도쿄 경시청, 해상보안청 관계자를 초빙해 한국인 범죄피해 대응과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임. 영사부 관계자는 “최근 자주 발생하는 재일 동포나 한국인 여행객 대상 범죄에 대해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고 말했음.

○ 日 고법, 한일회담 日측 문서 공개소송 기각(6/23)

- 일본 법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1965년 한일회담에 관한 일본 측 문서 중 유독 독도(일본명 다케시마) 관련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일본 정부의 손을 들어줬음.
- 일본 도쿄고등재판소(고등법원) 미나미 요시후미(南敏文) 재판장은 23일 일본 시민단체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청구를 기각했음. 미나미 재판장은 판결문에서 “북한과의 국교정상화 교섭이나 다케시마(독도)를 둘러싼 한국과의 영토 문제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 비공개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한 지난해 12월 도쿄지방법판소(지방법원)의 판단을 그대로 인정했음. 시민단체가 항소심에서 “문서를 작성한 지 50년 이상 지난 만큼 역사적인 기록으로 보고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는 “현재 계속되는 문제도 있어 장시간 지났다고 해서 비공개 근거가 소멸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음.
- 일본 시민단체는 한국 정부가 2005년 한일회담 한국 측 문서를 전면 공개하자 2006년 4월25일 일본 정부에 일본 측 문서 공개를 청구했음. 일본 정부는 2007년 8월부터 6차례에 걸쳐 일본 측 문서 6만장을 공개하면서 ‘일한회담에서 쌍방의 주장 및 문제점’등 문서와 ‘다케시마 문제에 관한 문헌 자료’ 등을 공개하지 않거나 주요 부분에 먹칠한 뒤 공개했음. 이에 대해 일본 시민단체는 2006년 12월부터 1~3차 소송을 잇따라 냈으며 이번 판결은 이중 2차 소송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었음. 일한회담문서 전면공개를 요구하는 모임 관계자는 “1심과 똑같은 판결을 할 거라면 2심 재판소는 도대체 왜 있는거냐”며 “최고재판소(대법원)에 상고해서 문서를 공개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음.



● <“한일병합 무효”..의원75명, 日총리에 건의>(6/23)

- 여야 의원들은 23일 오전 국회에서 ‘한일 강제병합 무효와 한일과 거사 청산’ 세미나를 갖고 일본의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에게 한일병합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해줄 것을 요구했음. ‘한국외교와 동북아평화연구회’(대표: 민주당 유선호 의원)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은 한나라당과 민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창조한국당 등 여야 의원 75명의 서명이 담긴 이 같은 내용의 건의문을 일본 민주당 쓰지 메구무 중의원에게 전달, 간 총리에게 전하기로 했음.
- 의원들은 건의문에서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을 위해서는 한일 강제병합에 관해 엇갈린 역사인식을 근본적으로 청산해야 한다”며 “강제병합일인 오는 8월29일을 전후해 간 총리가 1910년 한국병합이 원천 무효임을 선언해 역사적 전환점을 만들어 달라”고 밝혔다. 발표를 맡은 서울대 이태진 명예교수는 “일본은 한국에 ‘의정서’(1904년) ‘제1차 일한협약’(1904년) ‘제2차 일한협약’(을사조약.1905년) ‘일한협약’(1907년) ‘한국병합조약’(1910년) 등 5개 조약을 강요하면서 국권을 앗아갔는데, 이 중 한국 황제의 비준서를 갖춘 것은 하나도 없다”며 “국권 관련 사항을 국가 원수의 의사 표명 없이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말했다. 세미나에는 유 의원과 쓰지 의원 외에 민주당 정세균 대표, 박지원 원내대표, 홍재형 국회부의장, 자유선진당 권선택 원내대표 등이 참석했음.

● 日 간 총리, 李대통령과 캐나다서 회담(6/22)

- 일본의 센고쿠 요시토(仙谷由人) 관방장관은 22일 간 나오토(菅直人) 총리가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과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간 총리와 이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간 총리 취임이후 처음임. 간 총리는 24일부터 28일까지 캐나다를 방문함. 간 총리는 이번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이 대통령 외에 버락 오바마 미대통령, 후진타오 중국 국가주석,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 등과도 회담할 예정임.
- 한편 간 총리는 이날 오후 일본 기자클럽에서 열린 당수토론회에서 한국의 천안함 침몰 사태와 관련 “이 지역의 불안정은 일본의 자위권에 관계되는 만큼 일본에 대한 위협에 대해 미국과 협력해 나가면서 의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간 총리는 또 이날 오전 소집한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각료회의에서 향후 대응과 관련 “미국, 한국과의 공조 강화가 중요하다”면서 “캐나다 G20 정상회의에서 오바마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과 일치된 견해로 확실하게 이 문제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 그는 북한으로의 송금시 보고 기준액 인하 등 추가 제재조치를 확실하게 실시하라고 내각에 지시했음. 이에 대해 나카이 히로시(中井洽) 공안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제3국을 경유한 (일본 기업의) 북한으로의 수출입을 저지하는데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라. 미·중 관계

● 오바마, 후진타오 국민방문 초청(6/27)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에게 미국을 국민방문해 주도록 공식초청했다고 제프리 베이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 밝혔다. 베이더 선임보좌관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오바마 대통령이 후 주석에게 미국을 국민방문해 달라고 초청했다”면서 “후 주석이 이를 수락해 양측이 방문 시기를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외국 정상에 대한 국민방문 초청은 취임 이후 인도 총리와 멕시코 대통령에 이어 이번이 세번째임.
- 오바마 대통령과 후 주석은 토론토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개막에 앞서 개별 회담했다. 오바마는 이 자리에서 “우리는 북한의 천안함 공격을 용납할 수 없었고 분명한 대응 메시지를 보내야 했다”며 “우리는 중국이 그러한 메시지를 강화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중국이 환율 유연성을 확대키로 한 조치를 환영하면서 이는 글로벌 경제의 균형을 재조정하는 중요한 과정이며 “(환율 유연성 확대를)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양국 무역에서도 공정한 경쟁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에 대해 후 주석은 미국과 주요 현안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길 희망한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대처 노력을 강조하면서 “최근 양국의 공동협력 덕분에 이런 관계에서 진정한 진전이 이뤄져왔다”며 “우리는 미국과 주요 지역 및 국제현안들에 대해 대화와 협력을 강화하길 원한다”라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후 주석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뵙게 돼 너무 반갑다”면서 “우리 그리고 우리팀들이 지난 15개월간 신뢰관계를 형성하기 위해 매우 열심히 노력해 많은 것을 이뤄냈다는 게 나의 믿음”이라고 화답했다.

● 美상원의원들, 中에 ‘대북규탄 동참’ 촉구(6/26)

- 미국 상원의원 11명이 25일 천안함 사건과 관련한 중국의 대응 방식에 항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대북대응에 협조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중국측에 보냈다.
- 조지프 리버먼(민주.코네티컷),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의원을 비롯한 이들 의원은 이날 장예쑤이 미국주재 중국대사 앞으로 보낸 서한에서 천안함 사건을 조사한 민·관 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브리핑받기를 거부하고 있는 중국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유엔 안보리에서의 대북규탄에 중국이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 이들 의원은 “중국 정부가 합조단의 조사결과 브리핑 제안을 지금까지 거부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고 경악하고 있다”고 비난하면서 “더욱이 유엔 안보리가 북한을 규탄하는 결의안이나 의장성명을 채택하



는 것을 중국 대표가 막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데 대해 걱정스러워 하고 있다”고 강한 우려를 표시했음.

- 의원들은 이어 “합조단은 한국에서 53명의 민·군 전문가들이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호주, 스웨덴에서 24명의 전문가가 참여했고, 북한에 이번 공격의 책임이 있음을 결정적으로 밝혀냈다”고 상기하면서 “왜 당신(중국)의 정부가 이런 입장을 취하는지 설명해 달라”고 중국대사에 요구했음. 의원들은 “이런 중국의 입장은 정의를 주장하면서 천안함 침몰 사건과 관련한 다국적 조사결과를 심각히 검토해 보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지난달 28일 언급과도 배치된다”면서 “우리가 제기한 우려들을 중국 정부가 해소할 조치를 취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음.
- 구체적으로 이들은 “중국 정부는 합조단의 천안함 침몰과 관련한 공식 브리핑(제안)을 수용하고, 유엔 안보리에서 이 공격 행위를 다룰 국제적인 노력을 지지해야 한다”고 촉구했음. 미 의회 소식통은 이번 서한 발송과 관련, “중국이 이번 사건과 관련해 그동안 자신들이 언급해 온 대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데 상원의원들의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서한에는 민주, 공화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참여했다”고 말했음.
- 서한에는 민주당에서 리버먼 의원과 상원 군사위원장인 칼 레빈,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짐 웹(버지니아) 의원 및 빌 넬슨(플로리다), 에드워드 카프먼(델라웨어) 의원 등 5명이 서명했음. 공화당에서는 매케인 의원과 존 카일(애리조나), 제임스 인호프(오클라호마), 샘 브라운백(캔자스), 린지 그램(사우스캐롤라이나), 조지 러뮤(플로리다) 의원 등 6명이 각각 서명했음. 앞서 존 케리(민주.매사추세츠) 미 상원외교위원장과 리처드 루거(공화.인디애나)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외교위 청문회에서 중국 측의 적극적인 천안함 대응 필요성을 제기했음.

● 美외교위원장 “中, 北천안함소행 비난 동참해야”(6/24)

- 존 케리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위원장은 23일 “중국은 최근 한국에 대한 북한의 도발(aggression)을 비난하는데 동참해야 한다”며 중국도 천안함 사건을 저지른 북한의 소행을 비판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음. 케리 위원장은 이날 미 상원 외교위에서 ‘부상하는 중국과의 공통분모 찾기’라는 주제로 열린 청문회 모두 발언에서 이같이 촉구 하고, “중국은 미국은 물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나머지 멤버와 더불어 북한, 이란의 핵개발과 관련해 취해진 유엔의 제재를 적극 이행해 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음.
- 또 케리 위원장은 “핵확산에서부터 세계 경제안정, 기후변화협약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직면해 있는 거의 모든 글로벌 도전과제는 중국의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다”면서 “미국이 우방 및 동맹과의 조율 속에 중국의 점증하는 경제력, 군사력, 정치적 영향력에 어떻게 대



처할지가 21세기 국제질서 형성에 결정적인 요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케리 위원장은 “이번주에 중국이 위안화를 절상하겠다는 취지의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면서 “그러나 이 문제는 중국내에서 열린 논쟁의 대상인 만큼 우리는 중국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갈지를 면밀히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 <中, 환율개혁 발표 후에도 美와 공방>(6/24)

- 중국 정부가 위안화 환율의 유연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개혁하겠다는 발표를 한 이후에도 미국과 ‘환율 공방’을 계속하고 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주 인민은행의 발표 이후에도 미국의 압박수위가 높아지고 있는데 대해 강하게 반박했음. 친 대변인은 “위안화 환율은 미·중 무역불균형의 주요원인이 아니다”라면서 “환율 절상으로는 양국간 무역불균형 문제와 현재 미국이 안고 있는 낮은 저축률과 취업난, 과소비 등 경제 문제를 결코 해결할 수 없다”고 말했다.
- 그는 “미국은 남에 대한 비난과 압력 행사를 중단하고 스스로의 경제구조에서 문제의 해결책을 찾으라”고 충고하면서 “환율 문제의 정치화와 보호무역주의는 어느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미·중 양국간 무역불균형은 전세계 경제의 분업 등 구조적으로 초래된 이유가 크며 미국의 대중 첨단기술 제한도 이를 초래한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은 “중국은 대미 무역흑자를 추구하지 않는다”면서 “미국 제품의 수입확대와 무역균형 유지를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친 대변인의 이 발언은 미국 행정부가 중국의 제한적 위안화 절상 방침에 반발, 위안화 환율에 대한 조사 가능성을 검토하고, 의회가 중국 위안화 정책을 불공정 수출보조금으로 간주해 대응하는 법안 통과를 추진하는 등 미국의 압박 수위가 높아지는 가운데 나온 것임.
- 케리 로크 상무장관은 23일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위안화 환율정책을 통해 교역상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자국 업계 일각의 주장에 따라 해당 사안에 대한 검토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음.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은 지난 19일 유연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환율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환율 절상에 대한 기대가 높아졌으나 이후 추가 발표에서 “기본적으로 균형과 안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혀 환율 절상이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을 낳고 있음.

● 美정보당국, 中 ‘미국채 무기화’ 주목(6/24)

- 미국 정보 당국자와 학자들이 지난주 워싱턴에서 비공개로 모임을 갖고 중국이 9천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보유 미 국채를 ‘외교 무기’



로 사용할 때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를 논의했다고 이 모임에 참석한 한 관계자가 23일(이하 현지시각) 전했다.

- 그는 민간 싱크탱크인 '내셔널 인텔리전스 카운슬'(NIC)의 모임에 정보 당국자와 주요 중국 전문가들이 참석했다면서 중국이 보유 미 국채를 매각기로 결정할 경우 어떤 타격이 올지를 논의했다고 말했다. NIC는 웹사이트에서 '백악관 자문기구'라고 역할을 설명하고 있음. 이 회동은 미 재무부가 통상 4월에 발간되던 일정보다 많이 늦어진 반기 환율 보고서 발간을 준비 중인 가운데 이뤄졌음.
- 이 보고서는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할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돼왔음. 중국은 이번 주말의 토론토 주요20개국(G20) 정상회담을 앞두고 지난 19일 '위안 환율 변동폭을 유연하게 운용하겠다'고 갑자기 밝혀 한때 위안 절상 기대감을 높였으나 결국 '점진적이며 단계적인 조정'이란 그간의 기조를 재확인하는데 그쳤다는 실망감이 시장에 확산돼왔음. 중국은 환율 유연화로 앞으로 위안 가치 유지 용도로 미 국채를 사들일 필요성이 줄어들 것으로 미 관계자들은 보고 있음.
- 미 의회에서도 대중 환율보복 무역법안 처리가 예정대로 진행될 움직임임. 뉴욕 소재 글로벌 스트래티지-애널리시스 그룹의 폴 마르크 프스키 회장은 "최선의 공격이 때론 좋은 방어 수단"이라면서 "우리는 (중국의 미국채 매각에) 대비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와 직접 거래하는 18개 금융기관(프라이머리 딜러)의 한 관계자도 논의 시점이 실용적이라면서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명할 경우 어떻게 될지, 그리고 미 의회에서 환율보복 입법이 이뤄지면 중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를 (미리) 준비해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일부 중국 전문가는 중국이 미 국채를 일시에 대거 매각할 경우 미국에 충격을 주는 것 외에 자기네도 보유외환 가치가 떨어지고 내수 경제가 흔들릴 수 밖에 없는 '핵 옵션'이라고 분석했음.
- 한편 중국이 미 국채를 처분하더라도 인플레이가 진정세이며 달러 자산에 대한 외국 수요가 여전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이렇다 할 타격이 없을 것이나 2015년께가 되면 미국의 공공 부채가 19조6천억 달러로 국내총생산(GDP)의 102%로 늘어날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에서 차입 부담이 가중될 것이란 경고도 나왔음. 미 의회 예산국에 따르면 올해 부채는 13조6천억달러에 달할 전망이다. 일본은 중국 다음으로 많은 7천960억달러 어치의 미 국채를 보유하고 있음.

● 中, 한·미 연합훈련에 사실상 우려 표명(6/22)

-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시행하는 계획에 대해 "정세를 긴장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며 사실상 우려의 뜻을 표명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서해에서 실시될 한·미 연합 군사훈련이 중국에 위협이



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현 상황에서 유관 당사국들이 냉정과 절제를 유지함으로써 정세를 긴장시키고 이 지역(동북아시아)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친 대변인은 “우리는 (연합훈련에 대한) 관련 보도를 매우 주의깊게 보고 있으며 사태의 추이에 대해서도 매우 관심 있게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 친 대변인의 이 발언은 한국과 미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한국과 미국이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서해에서 군사훈련을 하는 데 대해 우려의 뜻을 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앞서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사가 발행하는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달 초 한·미 연합훈련에 미국 항공모함이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잇따라 게재해 연합훈련을 우려하는 중국 측의 목소리를 전달한 바 있음. 한·미 양국은 이달말 서해에서 대규모 연합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으며 이 훈련에는 미국 7함대의 항공모함 등 항모전투단도 파견될 것으로 알려졌다.

마. 미·러 관계

● 미·러 “러, WTO 가입 9월까지 완료”(6/25)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문제를 9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합의하는 등 양국 간 관계 ‘재설정(reset)’ 노력을 한 차원 격상시켰음. 오바마 대통령은 24일(현지시간) 백악관에서 미·러 정상회담을 마친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WTO 가입은 러시아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이해에도 부합하는 것”이라며 조속한 WTO 가입 지지 입장을 밝혔다.
- 오바마 대통령은 “올가을까지 기술적인 미해결 이슈들을 해소하도록 지시했다”고 밝혔고,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협상팀에 일을 서둘러 9월 말까지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기로 오바마 대통령과 합의했다”고 화답했음. 러시아는 올 연말까지 WTO 가입을 목표로 미국을 비롯, 유럽연합(EU) 등 각 국가와 협상을 해왔으나 일부 품목에 대한 관세 인하를 놓고 견해차를 해소하지 못해 가입이 지연돼 왔음.
- 양국 정상은 이날 천안함 사고와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북한에 대한 새로운 유엔 제재를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했으며,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우리는 정상회담에서 중동 위기문제, 이란 핵 해법, 한반도의 상황, 키르기스스탄 문제를 비롯, 가장 중요한 세계 현안들에 대해 함께 논의했다”고 말했다.
- 다만 양국 정상이 북한 문제에 대해 어떤 구체적인 입장을 표명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음. 양국 정상은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가금류 수출을 재개하는 데에도 합의했음.



- 미국산 닭고기 최대 수입국인 러시아는 미국산 가금류 생산·가공 과정에서 염소를 이용한 항균 처리를 문제 삼으며 올해 1월 수입을 중단했었음. 양국 정상은 키르기스스탄 사태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도 협력하기로 했음.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정상회담에 대해 미국과 러시아가 “관계를 재설정하는 데 성공했다”고 평가했음.
-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조지아 문제 등 일부 이슈들에서 러시아와의 차이를 인정했지만 “우리는 차이점들을 솔직하게 다뤘다”고 말하면서 오히려 양국 공통의 이해관계, 협력 합의 사안을 강조했다. 대(對) 테러전 공조를 위해 정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고, 양국 경제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더욱 긴밀한 노력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오바마 대통령은 부각시켰음. 메드베데프 대통령도 “미국의 노력이 아프간을 효율적이고 근대화된 국가로 이끌기 위한 것이라면 러시아는 미국을 지지한다”고 언급하기도 했음.
- 전문가들은 핵무기 감축 등으로 관계 재설정 의지를 천명한 미국이 이제 러시아와 무역과 투자 부문에 대한 협력 강화를 모색하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음. 그러나 일각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러시아와 관계를 강화하는 과정에서 너무 많은 것을 양보하고 있다는 비판도 나옴.

바. 중·일 관계

● 日총리 “G8정상회의에 中 초청해야”(6/26)

-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가 중국을 주요 8개국(G8) 정상회의에 초청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고 교도통신과 지지통신이 26일 보도했음. 간 총리는 25일 저녁(현지시각) 캐나다 무스코카에서 열린 G8 정상회의의 만찬석상에서 “한층 책임감을 높이려면 경우에 따라서는 중국을 G8 정상회의에 초청하는 방안을 고려해도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음. 간 총리의 이같은 발언은 G8 정상회의를 ‘선진(강대)국간의 의사소통의 장’으로 생각하고, G20 정상회의는 “선진국과 신흥개발국과 사이의 의견 조정의 장으로 위치 짓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겠느냐”는 생각에 기반을 둔 것으로 풀이됐음.

● 中, 日총리 ‘中군사력 주목’ 발언 반박(6/24)

- 중국 정부가 24일 간 나오토(菅直人) 일본 총리의 ‘중국의 군사력 증강을 매우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발언에 대해 반박했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간 총리의 발언에 대한 논평을 요구받고 “우리는 일본의 이같은 표현방식에 주목하고 있다”면서 “소위 말하는 미·일 동맹은 양국간의 문제로 양자 관계의 범위를 벗어나 제3국을 겨냥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음.
- 친 대변인은 “평화 발전의 길을 견지하는 중국은 어떤 국가와 누구에 대해서도 위협하지 않으며 누구의 위협도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



라고 강조했다. 일본 교도통신에 따르면 간 총리는 지난 22일 “급성장하는 중국의 군사력을 크게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우리는 이에 대해 더욱 주목해야 한다”면서 힘의 균형을 위해 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음.

사. 기 타

● 대만, 美에 조기경보기 업그레이드 요청(6/23)

- 미국의 대만 무기판매로 인한 미·중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대만이 미국에 조기경보기 업그레이드를 요청해 중국의 반응이 주목됨. 대만 국방부가 23일 호크아이 조기경보기 2대를 미국에 보내 현재 미 해군이 사용하는 조기경보기와 비슷한 수준으로 기능을 높여달라고 요구했다고 AFP 등 외신이 보도했음. 대만 측은 이미 보낸 조기경보기 2대를 내년 말에 인도받은 뒤 나머지 2대의 조기경보기도 순차적으로 업그레이드할 예정이며 여기에 56억 대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알려졌다.
- 대만 측은 업그레이드가 완료되면 어떤 악천후에도 조기경보기들을 이용한 효율적인 작전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음. 그러나 이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아직까지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관영매체들도 보도를 삼가고 있음. 미국은 지난 1월 64억달러 상당의 첨단무기를 대만에 판매하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과 ‘냉랭한’ 관계가 지속되고 있음.
- 실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이 지난 3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제9차 아시아안보회의 참석 길에 중국 방문을 요청했으나 중국은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며 거부하는 등 노골적인 불쾌감을 표시하고 있음. 중국은 대만을 필요하다면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통일해야 할 자국 영토로 여기고 있으며, 따라서 대만에 어떤 종류의 무기판매도 반대한다는 입장임.



[참고자료] <한미 정상회담 공동회견 전문>(연합뉴스, 6/27)

이명박 대통령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6일 제4차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 토론토에서 정상회담을 가졌다. 한미 정상은 회담에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시기 연기에 합의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비준 문제 등에 대해 논의한 뒤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합의사항을 발표했다.

다음은 이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의 공동회견 전문.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오늘 우리는 상당히 생산적인 회의를 가졌습니다. 특히 지금이 한국 전쟁 60년 기념하는 시기라는 점에 비춰서 양국의 우정과 동맹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내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이 대통령께서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이 대통령께서 어린 시절 자랄 때 미국의 한국 주둔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줬는지, 또 이것이 한미 관계에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얘기해줬습니다.

또 저는 이 기회를 빌려 천안함 사태 피해를 본 많은 한국민들에게 위로를 전하고 싶습니다. 이는 제 개인적 위로뿐 아니라 미국인 모두의 위로를 전하고 싶은 것입니다. 특히 이 사태에 있어 이 대통령께서 자제와 판단력을 갖고 대응해준 데 대해 상당히 깊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이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 안보리를 통해 이러한 조치를 추진하는 데 대해 미국은 완전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행동에는 그 대가가 따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는 군사동맹에 대해, 군사동맹의 중요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특히 한반도에서의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해 논의했고, 이를 2015년 후반에 전환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여러 가지 상황에 비춰 매우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한반도뿐 아니라 기존의 안보 상황에서 옳다고 믿습니다. 한국과 미국, 태평양 전체에 있어 안보가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여러 면을 봤을 때 지금 현재 우리가 협상하고 있고, 합의한 전작권 전환은 매우 효과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논의한 문제는 통상 문제입니다. 지금 현재 FTA(자유무역협정) 타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번 제가 한국을 방문했을 때 (한미) FTA 타결에 대한 저의 의지를 천명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미국의 무역대표부, 그리고 한국 측의 협상가가 모여서 이 FTA 협상을 의회에 제출할 수 있게 앞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11월



한국을 방문했을 때 상당한 추진이 이뤄지기를 바라고 그 방문 몇 개월 후에 우리가 이 협정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미국과 한국의 관계는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이 FTA는 미국의 고용창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자리 창출에 있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안보와 경제, 우정과 동맹에 대해 상당히 많은 시간 논의했고 이는 더욱 강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나와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우정도 강화되었고 다시 한국을 방문해서 한국 국민들과 이 대통령을 만나 뵙기를 고대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영어를 잘해 다 알아듣는 줄 알고 통역에게 부탁하는 것을 깜빡했습니다. (참석자 폭소)

▲이명박 대통령

오늘 나는 (한국)전쟁 (발발) 60년을 맞아 60년 전 미국이 보여줬던 강력한 지지와 젊은이들의 희생으로 한국이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었고 번영을 누릴 수 있었다는 점에서 오바마 대통령과 미국 국민에게 감사를 보내고, 특히 (미국) 상하원이 6.25와 관련된 만장일치의 결의를 해 준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천안함 사태가 발생했을 때 미국 정부가 보여준 강력한 동맹으로서의 역할에 대해 고맙게 생각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얘기가 있었습니까만 우리가 작전권 이양 문제, 천안함 관련 문제, 또 한미 FTA 관련 문제에 대해 합의한 바 있습니다.

작전권 이양과 관련해서는 정식으로 오바마 대통령에게 현재의 안보 환경과 양국의 동맹관계를 강화하는 의미에서 우리가 2015년 말까지 이양을 연기하는 것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께서 수락해주신 것에 대해 또한 고맙게 생각합니다.

또 천안함 사태 이후에 북한의 어떠한 도전과 도발에도 한미 양국이 강력한 대응을 한다는 것도 합의됐고 또 천안함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의 처리 문제와 여러가지로 천안함 이후에 우리가 공동으로 대처할 상황에 대해서 서로 합의를 했습니다.

한미 FTA 문제는 오바마 대통령이 설명한대로 지난번 한국 방문 시에도 이것을 강력하게 추진할 의사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제 보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목표 시한을 두고 이 문제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서로 합의한 데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제안에 대해 저희 한국은 기쁘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북한 핵을 억제하기 위한 유엔 결의도 마찬가지로 이란 핵 제지를 위한 유엔 결의에 대해서 우리는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 한국도 적극적으로



로 제재 실천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양국 정상회담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 강화하는 것을 확인하는 회의가 되었고, 오바마 대통령이 이야기하듯 양국 정상으로서 개인 우정으로서 양국 관계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을 말씀드립니다.

출처: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10/06/27/0503000000AKR2010062702210001.HTML>

☀ 국제관계연구센터 제공